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營養教育專攻

康 미 나

2018年 8月

제주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申 東 範

康 미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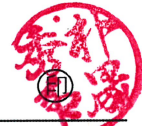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 年 6 月

康미나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곽 상 수



委 員

강 인 혜



委 員

신 등 범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8 年 6 月



A study on the awareness of staff on
Jeju Island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free meals

Mi-Na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Dong-Bum Shi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8 . 8 .

DEPARTMENT OF NUTRI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표 목차	Ⅲ
국문요약	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4
3.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6
1. 학교무상급식의 정의	6
2. 국외 무상급식의 배경 및 현황	7
1) 전체 무상급식 실시 국가	8
2) 부분 무상급식 실시 국가	8
3. 국내 무상급식의 배경 및 현황	9
1) 무상급식의 초기 단계	9
2) 무상급식의 확대 단계	12
3) 무상급식의 정착 단계	16
4. 제주지역 무상급식의 배경 및 현황	18
5. 무상급식의 찬반논쟁	21
1) 찬성 입장	21
2) 반대 입장	23
6. 선행 연구의 고찰	24

III. 연구방법	27
1. 연구 대상.....	27
2. 연구 도구.....	27
3. 자료 분석.....	29
IV. 연구결과 및 해석	29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29
2. 학교무상급식의 운영 관리에 대한 인식.....	30
3. 학교무상급식의 복지적 측면에 대한 인식	38
4. 학교무상급식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인식	40
5. 학교무상급식의 현안에 대한 인식	43
V. 결론 및 제언	51
VI.참고문헌	54
부록 1. 학교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58
ABSTRACT	66

표 목 차

표1. 연도별 무상급식 실시 학교 현황	14
표2. 2016년 3월 기준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학교 현황	15
표3. 전국 17개 시·도 무상급식 실시현황	16
표4. 전국 17개 시·도 무상급식 운영현황	17
표5. 제주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18
표6. 2018학년도 제주지역 무상급식비 1인 1식당 지원 단가	20
표7. 무상급식비 집행 시 반영 사항	20
표8. 설문지 문항 구성	28
표9. 조사자의 일반 현황	30
표10. 학교 무상급식의 필요성	31
표11. 학교무상급식이 필요한 이유	32
표12. 무상급식이 불필요한 이유	33
표13. 무상교육 범위에 급식비를 포함해야 하는가	34
표14. 무상급식의 대상자는 어느 범위까지가 적당 한가	35
표15. 무상급식이 교육에 도움을 주는가	36
표16. 무상급식의 교육적 역할	37
표17. 무상급식이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37
표18.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에 도움을 주는가	39
표19. 보편적 무상급식의 문제점	40
표20. 세금이 증가해도 무상급식을 찬성 하는가	41
표21. 세금이 증가해도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이유	42
표22. 세금 증가 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	43
표23. 무상급식은 급식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 하는가	44
표24. 무상급식이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절감 효과를 주는가	45

표25. 다른 교육비 삭감이 일어나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가	46
표26. 정당과 정치인들의 무상급식 공약을 옳다고 생각 하는가	47
표27. 학교무상급식은 전략적인 표플리즘 인가	48
표28. 안정적인 무상급식의 제도화를 위한 영양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49
표29. 무상급식 신뢰도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 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50

제주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직원들의 인식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조사 항목에 대해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검증 방법은 교차분석을 실시한 후 카이스트 검증을 실시하였고 교직원 인식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급식의 운영 관리 측면에서 무상급식이 필요한가의 질문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긍정 답변은 조사자 345명 중 241명(69.9%)이며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차별 없는 동등한 식사’가 94명 (27.3%)으로 가장 많으며 ‘균형 잡힌 식사 제공’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순서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의 대상자는 어느 범위까지가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고등학생’까지 161명(46.7%), 무상급식이 교육에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긍정 답변이 224명(64.9%)이며, 무상급식이 주는 가장 큰 도움은 ‘소득 격차 없이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식사’가 158명 (45.8%) 가장 많았다.

둘째, 무상급식의 복지적 측면에서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에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 답변인 ‘매우 도움을 준다.’ 81명(23.5%)이며 ‘도움을 준다가 141명(40.9%)로 222명 (64.4%)이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전면 무상급식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177명(51.3%)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국민의 조세부담 가중’이 62명(18.0%), ‘세금낭비’가 21명(6.1%), ‘다른 교육의 우선적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47명(13.6%), ‘국가

에 대한 복지의존성향' 38명 (11.0%)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으로 소득 재분배에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42명(12.2%), '그렇다' 116명(33.6%)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무상급식의 재정적 측면에서 무상급식 재정 부담 주체에 대한 질문에는 '국가' 124명(35.9%)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92명(55.7%), 국가나 지자체에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의 질문에서 가장 큰 이유는 '학교급식은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가 145명(42.0%)와 '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 져야하기 때문에'가 112명(32.5%)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라고 인식하였다.

무상급식이 세금이 증가가 이루어져도 찬성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 한다' 27명(7.8%)이며 '찬성 한다'가 82명(24.3%)로 109명 (32.1%)가 찬성 응답하였고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나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가 49명(44.1%) 응답하였고,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 무상급식을 증세까지 해서 하는 것은 낭비' 라는 응답이 55명 (43%) 나타났다.

넷째, 무상급식 운영에 대한 현안 인식에서 무상급식은 급식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 그렇지 않다'가 122명(35.4%), '전혀 그렇지 않다'가 80명 (23.2%)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이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절감 효과를 주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54명(15.7%)이며 '그렇다'가 168명(48.7%)으로 교육비 절감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였다.

정치인이나 정당에서 무상급식을 공약화 하는 것에 대하여 옳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 113명(32.8%), '전혀 그렇지 않다' 47명(13.6%)로 나타났다.

전략적 복지 포퓰리즘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40명(11.6%)이며 '그렇다'가 142명(41.2%)로 정치적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인식하였다.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화를 위한 방향 제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영양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에 대한 질문에는 '올바른 식습관과 식사에절을 교육' 146명(42.3%), '평생건강을 위한 단계별 영양 교육' 139명(40.3%)이며 '바른 먹거

리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 46명(13.3%), '식단을 직접 작성하고 요리를 실습하는 체험 교육' 이 11명(3.2%), '식품 알리지 및 특이체질 학생 등의 식이요법 상담' 3명(0.9%)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믿을 수 있는 식 재료 유통망을 확보하여 안전한 급식재료 사용' 199명(57.7%)이며 '올바른 식생활 문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로 이미지 개선'이 81명(23.5%), '충분한 예산 확보'가 28명(8.1%), '식단과 조리법을 개발하여 급식의 질 향상'이 20명(5.8%), '공동구매 등을 통한 식 재료 단가 낮추기'가 17명(4.9%)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의 정책 방향과 학교 급식 제도의 변화에 맞춰 등장하였고, 지방선거의 공약화로 내세울 만큼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무상급식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급식비 미납자를 감소 시켜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 할 수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이다. 급식은 교육의 한 부분이고, 의무교육 영역에 급식도 포함된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는 헌법에 따라 교육비가 무료이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의무교육에서는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으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차별과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게 급식을 실시 할 수 있다. 제도적인 밑바탕과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정치적으로 무상급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준다는 논리로 수공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천편일률적인 무상급식은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다른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들면서 교육의 질까지 떨어 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상급식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투입되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해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 제도 운영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고 급식경영, 위생과 안전관리, 운영평가 등 전반적인 급식의 운영 지원을 통하여 무상급식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특성화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농업도 발전시키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겠다. 무상급식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여 우수한 품질

의 급식을 제공하면 더불어 건강증진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도 많고, 일부만 실시하는 지역도 있다. 여전히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은 큰 관심을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의 확대와 효율적인 무상급식 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2010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12년 대통령선거를 거쳐 현재까지 최근 몇 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으면서 부각된 정책은 복지였고, 그 중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정책으로 ‘무상급식’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또한 무상급식은 서울특별시장의 임기 중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오는 등 정치·사회 분야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무상급식을 이념적 갈등이나 정치적 측면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교육적 측면의 공공성과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백승희, 2010).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실현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측면과 선별적인 지원 대상의 심리적 상처를 막기 위하여 모든 의무교육대상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이덕난, 한지호, 2010).

「헌법」은 제 31조 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8조, 2007.12.31).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닌다면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은 의무급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구희현, 안민석, 2009).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 및 국가의 책무성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국민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상 국가는 교육을 받는 아동의 편의를 도모하여 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의 교육의무이행을 가능하게 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의무교육의 무상이 요구된다(양건, 2007).

교육은 지·덕·체로서 인지적 학습능력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인성교육과 생활체육을 포함하는 범위에서 정의된다. 따라서 학교에서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교급식은 1992년 ‘초등학교 급식 전면 실시’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됨에 따라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근래에는 초등학교 급식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학교 급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향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은 기초체력과 건강유지·관리능력을 길러주고, 고령화 사회에 ‘평생건강관리’를 육성한다(전원재판부, 2006, 2008)고 법으로도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영양과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편식을 교정하고, 지도하는 등 식생활을 개선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평생건강의 기초를 마련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동기가 자연스럽게 유도되고 학생들의 편식, 비만 등 사회적 문제 개선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왔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 사회를 위한 건강한 인간육성이라는 투자목적으로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이해영, 2009).

그렇기 때문에 급식의 중요성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급식에 관한 제도적인 변화가 요구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무상급식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상급식이란 기존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으로 받았던 선별적 무상급식의 개념을 넘어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중학교의 의무교육에 따른 보편적 무상급식을 말한다.(이선희, 2011)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정 형편이 곤란한 학생의 급식비 납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1999년 학교급식법 개정(7차 개정, 1999.8.31.)을 통해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시·도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 중에서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주식 및 부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자 (이하 급식지원 대상 학생)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업일 및 방학기간 등의 급식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별적 급식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현길아, 2013).

그러나 가정의 소득수준에 의해 차등적으로 급식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급식비를 지원 받는 학생들에게는 낙인효과로 느껴지는 수치감과 열등의식은 정서적으로 위축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장기 12년간 매일 한 끼 이상 학교급식을 먹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비

추어 볼 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이자 복지’라는 명제를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며(이원영, 2010), 학교 무상급식의 제도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개념 하에서의 복지는 저소득층 결식아동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아동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학교급식은 짧은 역사 속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저소득층이 선별적 지원으로 받게 되는 빈곤층의 낙인 없이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로서의 학교 무상급식 확대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육복지 측면에서 학교급식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핵심적인 정책 즉,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무상급식의 운영이 필요한 것이다(이원영, 2010).

무상급식이라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바람직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청,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급식관계자, 국민 등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 계층에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급식의 사회적 비용 편익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비용보다 편익이 크고, 다른 정책에 비하여 편익의 정도가 크다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보다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다. 따라서 여러 검증을 거쳐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백승희, 2010).

우리 제주지역은 현재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2011년 3월 개학을 기점으로 유치원(사립·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었으나, 2012년도에 재정 부족으로 중학교까지 전면 확대하지 못하고 동지역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였고, 무상급식 확대 여부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가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가지고 점진적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으며, 제주도의회에서는 전면 실시를 주장하면서 여러 차례 논쟁을 하여 오다가 2012년 12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2013학년도부터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 전면 확대하여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학교 무상급식은 짧은 시간동안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학교 무상급식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핵심적인 정책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무상급식의 운영이 필요하다.

2015년 3월 기준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94.4%를 시행하는 전라북도와 92.6%를 시행하는 강원도에 이어 제주는 90.1%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세 번째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높은 비율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도 일반적인 학교급식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는 선별주의 복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제도이다. 교육복지 측면에서 학교급식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핵심적인 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무상급식의 운영이다. 특히 우리 제주지역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학생 교육을 직접 지도하고 담당하는 학교 교직원들의 인식 조사가 필요하다. 과거 학교급식이 단순한 점심 제공 과정이자 영양학적인 측면의 급식과정으로 인식되었던 한계를 뛰어 넘어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 및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측면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 실태를 파악하고 무상급식의 효율적 확대를 위하여 교직원 대상의 무상급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교사의 인식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의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을 하여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문제

무상급식은 급식을 직접 지도하고 집행하는 학교현장을 통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인 요인으로 논란이 분분하고, 교육재정의 보편성과 선별성 논쟁으로 인하여 교육재정 재원조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

라는 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과 학교시설 개선과 같은 부문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학생의 교육과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교직원을 중심으로는 무상급식에 관한 의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의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 실태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을 통해 향후 무상급식 추진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해 보았다.

- 첫째, 무상급식의 운영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 둘째, 무상급식의 복지적 측면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 셋째, 무상급식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교직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 넷째, 무상급식에 대한 현안과 향후 방향 및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범위는 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래 현재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정책과 관련하여 발표된 정부발간보고서 및 정책자료, 시·도 교육청의 정책시행 현황 보고서, 공식 보도자료 및 통계자료, 관련 이해집단 및 단체의 성명서 및 보도자료 등을 분석한다(조민희).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제주지역 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을 분석하여 무상급식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향후 제주지역 무상급식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교직원 대상 선정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7개교 교직원을 표집 하여 조사·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제주 전체교직원의 의견으로 보아 해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내 7개교 교직원을 표본 조사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타 지역까지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표준화된 도구가 아니라 선행 연구의 설문 조사를 참고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II. 이론 배경

1. 학교무상급식의 정의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법률 또는 사전 등에서 명확한 정의를 찾을 수 없고, 학계에서도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만 「학교급식법 제 4조 및 제 9조에 의거하여 무상급식을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학부모의 부담 경비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무상급식과 깊이 관련이 있는 주변제도와 정책들을 통해 개념과 정의를 고찰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본질적인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무상급식 지원이라 함은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해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전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와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이다. 또한, 의무교육 대상의 범위는 교육기본법 제8조 1항과 2항에 의해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의무교육 내용에 무상급식이 포함된다는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김상곤, 2011; 충북발전연

구원, 2011). 무상교육의 내용에는 헌법학자마다 조금의 견해 차이가 있다. 수업료만이면 된다는 「수업료 무상설」,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무상범위 법정설」, 교재·학용품의 지급과 급식의 무상까지 지원된다는 「취학 필수 비무상설」 등이 있다. 현재로서는 「무상범위 법정설」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의무교육 내용에 무상급식이 포함된다는 것은 법률에 따라 먼저 규정되어야 한다(하봉운, 2010).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재정을 밑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재정의 여건에 따라 무상범위 및 내용은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는 뜻이다. 고도의 공적인 의무교육의 범위 및 내용의 한도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허락하는 한도이므로 국가의 재정이 풍부하다면 의무교육의 범위 및 내용은 정비례할 것이다. 한마디로 “여기까지이다.”라고 법 규정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으며, 의무교육의 무상범위가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하봉운, 2010).

2. 국외 무상급식의 배경 및 현황

외국의 최초 무상급식 유래를 살펴보면, 19세기 노르웨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1937년 스웨덴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작하였고, 핀란드는 1943년 무상급식법 제정과 1948년 세계 최대 복지 수준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법을 제정하여 유치원과 초·중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였다(현길아, 2013). 인도에서는 1949년에 무상급식이 시작되었다(김민희, 2013).

OECD 31개 회원국 중 학교 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미국 등 20개국(전체의 65%)이며,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 이중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개 나라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보호 대상자들만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 전체 무상급식 실시 국가

(1) 스웨덴

의무교육 대상 모두에게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전체 무상급식의 지원 대상을 연령이 어린 유아부터 시작하여 중학생까지로 점차 확대하였다. 핀란드는 유아와 초등학생에 대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 중학생으로 점차 확대하였다(양지선, 2011).

(2)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의무교육 대상 모두에게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 이후 고등학교와 직업학교 학생에게까지 확대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 부분 무상급식 실시 국가

(1) 미국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유아(K학년)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 유아에게도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은 연방빈곤지표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고 있다(김민희, 2013). 미국의 학교급식 지원 대상은 보호자 부담 정도에 따라 무상, 할인, 유상 등으로 구분한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가계소득 및 가족 수가 고려된 연방빈곤지표를 근거로 130%미만인 가구이며, 연방빈곤지표 130%에서 185%미만 가구는 할인 급식을 제공하며, 그 이상은 유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소득층급식비 지원 방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현길아, 2013).

(2) 영국

영국은 지역별로 지원 대상자와 지원 요건에 차이가 있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4개 지역별로 학교급식지원에 차이가 있으며,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소득지원, 소득기반 구직자수당, 소득연계 고용·보조 수당, 「이민 및 망명법」 제 4부 해당자, 자녀세액공제, 국가연금 보장요소

적용 대상자 중 한 가지 이상의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 무상급식 지원 적격 판정을 받고 있다(현길아, 2013).

(3)독일

독일은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I 단계에 해당하는 개방형 전일제 학교와 의무형 전일제 학교에 재학 중인 사회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에게 급식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김민희, 2013). 전일제 학교를 중심으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주별로 학교급식 지원 비율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일제 학교급식요구도가 높지 않다(현길아, 2013).

(4)일본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요보호자’와 ‘준보호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현길아, 2013).

3. 국내 무상급식의 배경 및 현황

1)무상급식의 초기단계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6·25전쟁 이후 1953년에 아동의 구호를 위한 국제연합 아동기금(UNICEF)과 미국 경제 협조처(USAID)등의 외국원조에 의하여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외국원조기관에 의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1972년까지 20년간 실시되었으며, 주로 빵 급식이었다(김민희, 2013). 1963년부터 1972년까지는 연 200만 명이 대상이었고, 우유, 옥수수 빵, 건빵 등을 급식하였다(김기남, 2000). 1967년 3월에는 학교보건법을 제정하였는데, 학교보건법 제 12조에 “초등학교 아동에 대하여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실시한다.”고 명시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1973년 외국 구호기관의 원조가 종료된 후에는 정부예산으로 빵과 우유급식이 유지되었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그 규모는 축소되어 시행되었다. 1977년에 발생한 빵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이후에는 제빵급식이 전면 폐지되면서 빵 무상급식도 중단되었다(조민희,

2016).

이후 우리나라의 무상급식은 1992년 시작되었다. 무상급식은 주로 두 가지형태로 시행되었는데, 부모를 대상으로 자산조사(Means Test)를 실시하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Institution approach, 보편적 무상급식)과 자산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정해진 경제수준 이하의 자녀에게만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방법(Residual approach, 잔여적 무상급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복지 차원에서 급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써,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조민희, 2016).

그러다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한 채 빈곤 아동의 중식 지원 대상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결식아동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와 같은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먹거리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제시하게 되었다(권 웅, 2012).

2001년 경기도 과천시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최초로 보편적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하였으며, 2004년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순영의원이 국회에 대표 발의를 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전환, 무상급식의 확대’라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는 무상급식의 시초가 되었다. 2005년에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최초의 농·산·어촌 무상급식 실시를 시작하였고, 2007년 경남 거창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행되었다. 2009년 전국 11개 시·도에서도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1,812개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였다.

2004년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와 2007년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 및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이덕난, 한지호, 2010), 2007년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에서 공약으로 등장한 후, 2008년 3월 경남과 전북에서 실시되었으며, 초기에는 정치적 이념문제로 번지지 않는 않았다. 초기 무상급식은 교육계 주류로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교육부 및 각 도 교육청에는 학습비나 시설 개·보수 비용 등 지출해야 할 예산항목이 산적해 있었고, 잘사는 집 아이까지 일률적으로

공짜 밥을 먹어야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김길수 교육위원은 “무상급식 취지는 좋지만, 교육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계획 없이 밀어 붙인다면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박종훈 교육의원은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예산에 재원이 쏠린다면 다른 중요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경남일보, 2008. 3. 20). 권정호 교육감은 정부 교부금이 빠듯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직접 만나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설득했으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난항을 겪었다. 2009년 안민석 의원과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에서 주최한 “무상학교급식,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시한 토론회에서는 학교급식을 제도화한 국가가 책무성 실현 차원에서 급식시설비 및 운영비와 식재료비를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안민석의원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경기운동본부, 2009).

무상급식 논쟁이 불붙기 시작한 계기는 2009년 12월이다.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무엇을) 제출하였으나, 보수적인 여당 교육위원과 한나라당 도의원이 주류를 이루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경기도 의회는 진보교육감을 손보겠다는 매우 정치적인 이유로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무상급식에 관한 관심이 자리를 잡았다(이원영, 2010). 이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색깔론을 내세우며,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월례조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무상급식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중앙일보, 2009. 12. 2). 이후 12월 16일 국회의원회당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 한국당 등의 야당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로써 무상급식 논쟁은 본격적인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보편적 무상급식 정책은 김문수 경기지사과 한나라당의 대응 여하에 따라 크게 이슈화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참여정부처럼, 아니 안상수나 이원희처럼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계적, 점진적 무상급식 확대를 받았더라

면 적어도 지금처럼 크게 이슈화 되지 않았을 것이다(김대호, 2010).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당론 형성을 위한 논의가 있었는데 원희룡 의원 등은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이견을 보였다. 원희룡 의원은 2010년 2월 2일 국회에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밝혔으며(경향신문, 2010. 2. 22), 박종근, 남경필 의원은 ‘중산층이 붕괴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역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경향신문, 2010. 3. 18).

2) 무상급식의 확대단계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는 기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까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민선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무상급식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회시민단체와 지역주민에게 무상급식 실시를 약속하였다. 6·2 지방선거 준비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하였으며, 이에 반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예산제약과 부자급식, 정치 포퓰리즘’이라는 명분으로 반대하였다. 2010년 12월 2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만들고, 201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조례를 만들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은 부자급식, 세금급식,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의회출석거부와 주민투표 발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2011년 8월 24일에 실시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25.7%로 개한기준인 33.3%를 넘지 못하여 서울시민의 투표거부로 무산되었다. 주민투표에 비용 180억 원을 들이고 무상급식의 찬·반에 대한 주민의견도 파악하지 못한 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 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무상급식은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야당 성향의 희망연대 대표 박원순 후보는 보편적 무상급식 확대를 교육복지사업 제1순위로 약속하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공공보육을 교육복지 정책 우선적 사업으로 정하여 무상급식 확대보다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교실이나 급식실 등 교육인프라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며 선별적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대조를 보였

다(정숙임). 재보선 선거결과 박원순 시장이 새로운 서울시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무상급식정책도 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 선거결과를 계기로 서울시는 보편적인 전면무상급식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실시된 제19대 총선에서는 무상급식정책 뿐만 아니라 무상보육정책 실시까지의 복지이슈들이 큰 영향을 가지게 되었다. 무상복지공약들이 선거의 공약으로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무상급식정책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되게 되었다(조민희, 2016).

그러나 이런 무분별한 공약들과 정책들은 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급식분담금을 둘러싼 또 다른 논쟁을 발생시켰다(조민희, 2016). 최근 경남 지역의 무상급식이 그 예이다. 경남 지역의 학교 무상급식은 2014년까지 읍·면 지역 초·중·고교 및 동 지역 초등학교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재정적 부담의 이유로 경남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2015년에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고, 2015년 4월 1일, 경남지역 무상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박종훈 교육감과 홍준표 지사 간의 무상급식 논쟁은 수개월간 지속되었고, 2015년 10월 5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임기 내에 ‘경남형 교육급식’ 모델을 만들어 급식 문제를 해결할 뜻을 밝혔다. 그러다가 2016년 2월,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일단 무상급식 재개에 합의했다. 그리하여, 경상남도 무상급식 대란 사태가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17개월 만에 원상회복되었다.

표1. 연도별 무상급식 실시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월 현재, 전국 1만 1,630개의 초·중·고등학교 중 74.3%에 해당하는 8,639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6,049개 초등학교 중 5,783개교, 3,217개 중학교 중 2,519개교, 2,364개 고등학교 중 337개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각각 전체의 95.6%, 78.3%, 14.3%에 해당한다.

표1. 연도별 무상급식 실시 학교 현황

연도	무상급식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급 학교 합계		
	전체 학교수 (개)	무상 급식 학교수 (개)	비율 (%)	전체 학교수 (개)	무상 급식 학교수 (개)	비율 (%)	전체 학교수 (개)	무상 급식 학교수 (개)	비율 (%)	전체 학교수 (개)	무상 급식 학교수 (개)	비율 (%)
2009	5,852	1,427	24.4	3,110	304	9.8	2,234	81	3.6	11,196	1,812	16.2
2010	5,845	2,123	36.3	3,128	427	13.7	2,255	107	4.7	11,228	2,657	23.7
2011	5,893	4,703	79.8	3,150	803	25.5	2,286	205	9.0	11,329	5,711	50.4
2013	5,942	5,622	94.6	3,180	2,393	75.3	2,326	300	12.9	11,448	8,315	72.6
2014	5,960	5,607	94.1	3,190	2,433	76.3	2,333	311	13.3	11,483	8,351	72.7
2015	6,009	5,247	87.3	3,212	2,320	72.2	2,352	238	10.1	11,573	7,805	67.4
2016	6,049	5,783	95.6	3,217	2,519	78.3	2,364	337	14.3	11,630	8,639	74.3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6.3.15.)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전체 821개의 학교 중 94.5%에 해당하는 776개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남 지역의 초등학교 428개교 및 중학교 250개교에서 모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며, 고등학교의 경우도 143개교 중 98개교(68.5%)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다.

한편, 표2. 2016년 3월 기준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학교 현황에서 보면 대구는 전체 441개의 학교 중, 19%에 해당하는 84개의 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 지역의 초등학교 224개교 중 62개교(27.7%), 중학교 125개교 중 21개교(16.8%), 고등학교 92개교 중 1개교(1.1%)에서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2016.3.15.))

우리 제주지역은 학교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무상급식 실시 학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은 74.3%로, 전년(67.4%)보다 6.9%포인트 올라 2009년 무상급식 추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현재 전국 초등학교의 95.6%, 중학교의 78.3%, 고등

학교의 14.3%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 무상급식의 경우 초등학교(112개교), 중학교(45개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으나 고등학교(30개교)에는 도입되지 않아 84.0%의 실시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인 74.3%를 약 10%포인트 웃도는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1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학교 100% 무상급식 지원을 시작한 뒤 2012년 동지역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 확대 지원, 2013년부터 유·초·중학교 전 학생 무상급식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제주일보 2016.3.15). 이처럼 제주도는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철회파동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무상급식 실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현재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2. 2016년 3월 기준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학교 현황

(단위: 개교, %)

시도	전체 학교 수				무상급식 학교 수												비율 B/A
	초	중	고	계 A	초			중			고			합계 B			
					전체	부분	계	전체	부분	계	전체	부분	계	전체	부분	계	
서울	601	384	318	1,303	560	0	560	381	0	381	0	0	0	941	0	941	72.2
부산	308	172	145	625	301	0	301	6	0	6	0	0	0	307	0	307	49.1
대구	224	125	92	441	62	0	62	21	0	21	1	0	1	84	0	84	19.0
인천	247	134	125	506	247	0	247	5	0	5	5	0	5	257	0	257	50.8
광주	153	91	67	311	153	0	153	91	0	91	2	0	2	246	0	246	79.1
대전	146	88	63	297	146	0	146	2	0	2	1	0	1	149	0	149	50.2
울산	117	63	56	236	55	28	83	7	0	7	1	0	1	63	28	91	38.6
세종	37	18	14	69	37	0	37	18	0	18	4	0	4	59	0	59	85.6
경기	1,254	621	470	2,345	1,254	0	1,254	621	0	621	9	0	9	1,884	0	1,884	80.3
강원	351	162	117	630	351	0	351	162	0	162	42	0	42	555	0	555	88.1
충북	260	128	83	471	260	0	260	128	0	128	0	0	0	388	0	388	82.4
충남	420	188	116	724	420	0	420	188	0	188	0	0	0	608	0	608	84.0
전북	421	209	133	763	421	0	421	209	0	209	70	0	70	700	0	700	91.7
전남	428	250	143	821	428	0	428	250	0	250	98	0	98	776	0	776	94.5
경북	470	271	192	933	362	86	448	184	55	239	9	1	10	555	142	697	74.7
경남	500	268	200	968	500	0	500	0	146	146	9	85	94	509	231	740	76.4
제주	112	45	30	187	112	0	112	45	0	45	0	0	0	157	0	157	84.0
계	6,049	3,217	2,364	11,630	5,669	114	5,783	2,318	201	2,519	251	86	337	8,238	401	8,639	74.3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6.3.15.)

3) 무상급식의 정착단계

“2018년 3월 현재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82.4%인 465만 4000명이 무상급식을 먹고 있으며(경남연합일보, 2018.4.25.), 표3에 전국 17개 시·도 무상급식 실시 현황을 보면,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실시 지역은 강원도, 세종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이다. 초·중학교는 실시하는데 고등학교 미실시 지역은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도이고, 고등학교 일부 학년이나 일부 기초자치단체 등 부분적 실시 지역은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이다. 대구광역시는 유일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 미실시 지역이다(임대윤, 2018.5.8.).

무상급식이 처음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우리 사회에서 무상급식 제도는 보편화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무상급식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표4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무상급식이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 보자.

표3. 전국 17개 시·도 무상급식 실시현황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강원도	○ 76,772(2014)	○43,999(2014)	○53,516(2018)
경기도	○733,941(2012)	○366,856(2014)	△422,839
경상남도	○186,619(2013)	○93,643(2018)	△111,618
경상북도	○127,642(2018)	△65,906	×84,926
광주광역시	○88,189(2011)	○47,900(2011)	△58,976
대구광역시	○124,708(2018)	×68,893	×86,664
대전광역시	○84,240(2014)	○44,961(2018)	×53,770
부산광역시	○150,863(2014)	○80,719(2017)	△99,662
서울특별시	○426,33(2011)	○227,004(2014)	×282,968
세종특별시	○20,764(2012)	○8,602(2012)	○7,747(2018)
울산광역시	○67,238(2017)	○31,952(2018)	×37,667
인천광역시	○156,470(2011)	○78,826(2017)	○92,1959(2018)
전라남도	○93,233(2012)	○49,642(2012)	△63,631
전라북도	○97,383(2011)	○53,303(2012)	○67,149(2018)
제주도	○38,901(2011)	○19,603(2013)	×22,422
충청남도	○116,963(2011)	○57,544(2014)	△70,406
충청북도	○84,052(2011)	○46,287(2011)	△54,937

- ※ ○은 전 지역에서 전 학년 무상급식 실시
 - ※ △은 일부 학년이나 일부 기초단체 등 부분적 실시
 - ※ × 은 미실시
 - ※ ○, △, × 옆 숫자는 각 광역자치단체 내 해당 학생 수 (단위 : 명)
- 출처 : 뉴 트리 앤(2018.4.)

표.4 전국 17개 시·도 무상급식 운영 현황

지역	무상급식 운영 현황
강원도	전국 최초로 유치원·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경기도	전국 최대 규모의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한 무상급식, 중단 위기 딛고 재개
경상북도	타 시도에 비해 늦은 2018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광주광역시	오랜 무상급식에 높은 만족도로 곧 고등까지 전면 무상급식 계획
대구광역시	2017년에는 초등 일부, 2018년부터 초등 전 학년 무상급식 결정
대전광역시	지자체와 교육청 합의로 계획보다 일찍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부산광역시	이전 보이던 시교육청과 시의회 합의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서울특별시	주민 투표 논란 끝에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으로 점진적 확대
세종특별시	시작부터 체계적으로 시행해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
울산광역시	제일 낮은 무상급식 비율에서 초·중학교 전면 실시로 급격한 변화
인천광역시	영·유아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범위 확대
전라남도	2017년 초·중·고 무상급식 비율 94.5%로 전국 최고
전라북도	무상급식 논쟁하던 2010년 당시 무상급식 비율 최고
제주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만든 무상급식 조례
충청남도	도내 최초로 천안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
충청북도	최초의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시행

4. 제주지역 무상급식의 배경 및 현황

제주지역에서는 1992년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농·산·어촌의 초·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였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의무교육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비 지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제주지역 역시 교육감 및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서 단계적인 무상급식 확대를 통한 소외 없고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향상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0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무상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급식비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1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과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2년도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이 재정 부족으로 기존의 지원 대상자를 포함한 동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만 확대 지원하여 오다가 2013학년도부터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까지 전면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표5. 제주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구 분	내 용
기 본 방 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초·중·특수학교 전 학생에게 학교급식비 지원 ○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 다자녀가정(첫째부터)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출산장려 ○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 고등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 단계적 추진
무 상 급 식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부터 저소득층 (자녀)학생 급식비지원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소요예산을 교육청에서 확보하여 지원 사업 추진 ○ 2005년부터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 2010년부터 읍면지역 유·초·중학생, 다자녀 가정(넷째부터) 급식비 지원 ○ 2011년부터 사립유치원 및 동지역 유·초등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 ○ 2012년부터 동지역 중 3학년 급식비 지원 확대(추가) ○ 2013년부터 유·초·중·특수학교 모든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지역 중학교 1,2학년 추가 ○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급식지원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담당 하나 학기 중 토·공휴일의 중식지원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 ○ 2014학년도부터 저녁급식 실시 학교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저녁 급식비 추가 지원, 2018학년도부터 저녁급식비 지원 대상에 특수교육대상자 포함 ○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생 학부모부담급식비 중 인건비 지원

표6. 2018학년도 제주지역 무상급식비 1인 1식당 지원 단가

❖ 학교 규모별 1인 1식당 지원 단가 (단위 : 원)

구분	100명 이하	101명~200명	201명~300명	301명 이상	비고
사립 유치원	3,510	3,280	3,060	3,010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구분	도서지역			50명 이하	51~ 100명	101~ 150명	초·중 통합	151~ 300명	301~ 500명	501~ 800 명	801~ 1,100 명	1,101 ~ 1,600 명	1,601 명 이상	비고
	비양 분교 마라 분교	추자 신양 분교 가파	우도 (초·중 통합)											
공립 유초	4,200	3,380	3,180	3,250	2,920	2,780	2,720	2,620	2,440	2,340	2,240	2,150	2,060	식품비 및 운영비

구분	도서지역		초·중 통합	200명 이하	201명~ 400명	401명~ 600명	601명~ 1,000명	1,001명 이상	비고
	추자중	우도중							
중	3,480	3,180	2,720	2,750	2,650	2,530	2,410	2,350	식품비 및 운영비

* 급식인원수는 학생 배치계획에 따른 인원 적용 (유치원+학생 수+교직원)

표7. 무상급식비 집행 시 반영 사항

- 급식비는 연간 평균 186일 범위 내에서 학교별 급식일수로 지원
- 전일 행사일인 경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은 지원일 수에서 제외 되
나,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지원 여부는 연간 평균 186일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결정
 - * 지원 원칙 : 학교 내 급식소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
 - * 186일은 평균일수이므로 학년별 급식일수를 더할 경우 초과될 수 있음
- 무상급식은 학부모가 부담하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급식비 집행 관
리는 학부모부담급식비 집행방법과 동일하게 운영

5. 무상급식의 찬·반 논쟁

1) 찬성 입장

전면 무상급식은 주로 진보성향의 야당 정치가, 진보교육감, 진보시민단체에서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으로 정치성을 띠었다고 볼 수 있겠다. 전국 6개 시·도의 교육감 중 진보 교육감은 서울시 박노현, 광주시 장휘국, 경기도 김상곤, 강원도 민병희, 전북 김승환, 전남 장만채 등 6명이다. 이들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적 측면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의무교육의 실현 면에서 필요성을 제기한다. 헌법 제31조의 2항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할 받게 할 의무를 진다.」와 제3항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규정에 의거 급식도 의무교육의 연장선으로 본다.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해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무상급식 제공 범위로 간주하며, 국가의 재원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한다. 공교육에 따른 국가의 책무·공공성 및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급식 역시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도출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장기 12년간 매일 한 끼 이상 학교 급식을 먹고 있고, 전국의 1만여 개 초·중·고등학교에서 750만 명이 학교급식을 먹고 있다. 교육은 개인의 능력과 사회경제적 역량과 지위를 개선하여 개인 삶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이원영, 2010). 또한, 학교급식은 교육의 한 장으로서 이를 통해 먹을거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연의 귀함을 가르칠 수 있으며, 우주의 섭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훌륭한 교과서가 바로 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이라 하였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학교급식의 목적이며 교육의 일환으로 급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따라 무상급식이 필요하다 하였다(정명옥, 2010).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시민단체도 ‘급식이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초·중·고 모두 무상급식을 확대해야한다' 고 주장한다.

(2)경제적 측면

무상급식은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시켜 주고, 교육의 양극화를 줄여 준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가정경제는 크게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인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사부담 공교육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급식비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교육복지 확대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김상곤, 2011).

또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세금은 징수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징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선희, 2011). 부자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여 서민층에 혜택을 주면 된다는 것이다.

진보성향에서는 4대강 예산,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무상급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후보자 일때 “서해벚길 사업, 한강 예술섬 사업 및 토건성 예산을 절감해서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의 지출 중 타당성이 결여되고 낭비성이 있는 것을 무상급식의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

(3)복지적 측면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정서적 상처를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는 무상급식이 저소득층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학생들에게도 가난으로 인한 낙인효과와 차별을 내면화시켜 성장 과정에 심각한 비교육적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상곤 경기교육감(2011)은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지원은 저소득계층의 급식비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낙인 효과(stigmaeffects)’를 초래하여 상처와 좌절을 남길 뿐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일으키며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또한,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라 하였다. 무상급식을 선도적으로 시행한 경남과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낮은

지역임에도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정숙임, 2012).

(4)정치적 측면

야당 측은 교육 분야의 정치 전략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여당인 한나라당은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선별적·시혜적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다(정숙임, 2012).

2) 반대 입장

전면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보수성향의 여당 정치가, 보수로 분류되는 교육감, 보수시민단체이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교육적 측면

무상급식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적용범위가 관련법령 등을 통해 언급된 바가 없으므로 배움이 아닌 직접적으로 의무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 적용범위라 주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한다(조민희, 2016). 학교급식이 영양공급 차원의 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적 측면에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면서 핵심적인 학교교육의 부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2)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예산 부족과 다른 부분의 우선적 사업의 배정을 방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무상급식에 투자가 집중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시설의 환경 개선과 교육활동비 명목의 예산이 줄어들어 불균형이 우려된다. 국회의원 강명순(2010)은 우리사회에 소득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무상으로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하자는 것은 기회의 평등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잘사는 가정의 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부자까지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부자급식이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므로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았다(김명순, 2010). 2011년 서울시장 후보 나경원은 “무상급식 확대보다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교실이나 급식실 등 교육인프라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고 하였다(중앙일보,

2011. 10. 20).

(3)복지적 측면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경우에 복지 의존증·복지병 등이 만연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정책은한 번 시행되면 철회하기가 어려운 불가역적 특성을 띤다. 복지에 의존하려는 복지의존증이 만연할 것이다. 국가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복지 대상 범위에 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만성적으로 저소득층에 머물러는 의존성을 ‘복지병’이라 하였다(정숙임, 2016).

(4)정치적 측면

무상급식은 선거에 출마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표를 얻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치적으로 이슈화된 사업이라 볼 수 있다(정숙임, 2016). 무상급식은 인기 영합정책이란 것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논리에 의한 인기 영합식 교육정책일 뿐이며(최상기, 2010), 새누리당 정치인과 보수 성향 단체에서 전면 무상급식정책은 복지 포퓰리즘 이므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을 집중 지원하여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전면적 무상급식은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저급한 포퓰리즘”이라며 공박했다. 이군현 의원은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무조건 급식을 실시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라며 색깔론을 펼쳤다(김대호, 2010).

6. 선행 연구의 고찰

무상급식제도 도입과 실시에 따른 인식 조사를 통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강은희(2011)는 강원도 횡성지역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상급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대체적으로 높았으며,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비중·고등학교 교직원보다 더 높게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무상급

식이 필요한 이유로는 ‘의무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무상급식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확대 방안으로는 학교급식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학교 급식법」 개정을 통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단계적 무상급식 예산확보와 정책을 추진할 구체적 재정 조달과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또한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교육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중요하며,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학교급식 운영은 ‘선별적 복지’ 정책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바뀌어 가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 무상급식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도록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편적 복지’ 실천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선희(2011)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연구에서 무상급식 제도 도입의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직업에 따른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생은 미납자 해소와 학부모 부담 해소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공무원과 주부들은 지방자치단체 정책 의지를 도입 원인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회사원은 보편적 복지로의 변화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나아가 무상급식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전담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국립 급식 경영 지원 기구(NFSMI)가 있고, 일본은 일본 체육 진흥 센터 및 도부현에 ‘학교 급식회’ 등을 설치·운영하여 연구 및 기술지원, 교육기능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재정 및 지출의 효율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무상급식 제도 운영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고 급식경영, 위생, 안전관리, 운영평가 등 전반적인 운영 지원을 통하여 무상급식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양지선(2011)은 무상급식에 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상급식필요성에 있어서 학생의 82.8%, 학부모의 65.3%가 찬성하여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무상급식 제도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급식도 교육에 들어가므로,

의무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의 급식은 무료여야 한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으며, 무상급식 혜택 범위는 고등학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58.6%로 가장 많았다.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았고, 무상급식으로 인한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학부모가 3.4%로 적었으며, 대부분이 반대하였다. 전체 무상급식의 질과 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직영방식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국가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학부모, 교육계,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협력하여 의견의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민희(2013)는 학교급식의 변화를 울산광역시 무상급식에 대한 교직원과 학생의 인식도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을 분석, 발전 방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현길아(2013)는 제주지역 학교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하고 그 발전적 방안을 도출하여 학교무상급식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유린(2014)은 충남 일부지역의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무상 학교급식의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이원희(2014)는 중학교 여학생 및 중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만족도와 급식의 인식도, 친환경농산물의 인식도, 친환경급식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지식 및 인지도를 파악하여 친환경무상급식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민희(2016)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무상급식정책 형성과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최숙경(2016)은 무상급식이 학교 교육제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교직원들이며, 기존 문헌과 설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 수집은 2015년 11월 2일부터 2015년 11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이들 자료를 토대로 무상급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였으며, 더불어 무상급식에 대한 행정적 측면과 복지적 측면에 대하여 재고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내 7개 학교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영양(교)사를 통해 자료 수집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직접 전달하거나, 일부 영양(교)사에게는 개인의 E-mail 발송을 통해 전달하였다.

전체 400부의 설문지 중 38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의 신뢰성이 부족한 설문 37부를 제외하여 345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조민희:2016, 현길아:2013, 김민희:2012, 강은희:2011, 양지선:2011)를 참고하였고, 지도교수와 동료 연구자들의 조언을 받아 개발하였다. 영양(교)사와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중복성과 난해한 문항에 대해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설문내용의 구성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크게 일반적 사항, 학교급

식 관심도, 무상급식 필요성, 무상급식 운영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지 구성은 다음의 표8과 같다

표8. 설문지 문항 구성

조사 항목	조사 내용	문항수
일반사항	성별, 연령, 직위, 근무경력, 취학자녀유무, 학교급별	6
운영 관리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급식 필요성 : 필요 이유, 불필요 이유 - 무상교육 범위 급식비 포함 여부 - 무상급식 대상 범위 - 무상급식 시행 계층 - 무상급식의 교육적 측면 : 교육적 역할, 비 교육적 이유 	9
복지적 측면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 무상급식 인식 : 선별 무상급식 필요 이유, 선별 무상급식 불필요 이유 - 전면 무상급식의 보편적 복지에 도움 여부 - 보편적 전면 무상급식 문제점 - 전면 무상급식의 소득재분배 도움 여부 	6
경제적 측면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급식 실시 경우 재정부담의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 이유 - 무상급식 시 세금 증가 찬성 여부 : 찬성 이유, 반대 이유 	5
현안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급식 급식의 질 - 음식물 쓰레기와 무상급식의 상관관계 -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절감 효과 여부 - 타교육비 예산 삭감 시 인식 - 선거 시 정치인들의 공약화에 대한 인식 - 정당의 포퓰리즘 인지 여부 -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시위, 단식, 서명 운동) 인식 -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인식 - 현재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인식 : 무상급식 중단 찬성, 무상급식 중단 반대 - 안정적 정착화 위한 영양교육 - 무상급식 신뢰도 향상위해 우선해야 할 것 	13

3. 자료 분석

본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 분석에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학교무상급식의 운영 관리, 복지적 측면, 경제적 측면, 현안에 대한 인식 문항 분석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한 후 카이스트 검증(chi-squaretest)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95% 수준($p=0.05$)에서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제주지역 무상급식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표9의 교직원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남자가 141명(40.9%), 여자가 204명(59.1%)로 여자가 많았다. 연령을 살펴보면 40대가 115명(33.3%), 50대가 102명(29.67%), 30대가 90명(26.1%), 20대가 38명(11%)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242명(70.1%)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기타교직원(교육 공무원)69명(20.0%), 행정직 34명(9.9%)이다.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11~20년 근무자가 102명(29.6%), 21년 이상 근무자는 88명(25.5%), 6~10년 근무는 84명(24.4%), 5년 미만 근무는 71명(20.6%)순으로 나타났다. 취학자녀의 유무는 없다 187명(54.2%), 있다 158명(45.8%)로 나타났다. 학교급별을 살펴보면 중학교 교직원이 114명(33.0%)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교직

원이 109명(31.6%), 초등학교 86명(24.9%), 특수학교 36명(10.4%)순으로 나타났다.

표9. 조사자의 일반 현황

		(N=345)	
분류		빈도 (명)	퍼센트 (%)
성별	남	141	40.9
	여	204	59.1
연령	만30세미만	38	11.0
	만30-40세	90	26.1
	만41-50세	115	33.3
	만51세이상	102	29.6
직위	교사	242	70.1
	행정직	34	9.9
	기타 ¹⁾	69	20.0
근무경력	5년이하	71	20.6
	6년-10년	84	24.3
	11-20년	102	29.6
	21년이상	88	25.5
취학자녀	있다	158	45.8
	없다	187	54.2
학교급별	초등학교	86	24.9
	중학교	114	33.0
	고등학교	109	31.6
	특수학교	36	10.4
	합계	345	100.0

¹⁾은 교육 공무원 및 방과 후 강사

2. 학교무상급식의 운영 관리에 대한 인식

표10의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가 149명(43.2%)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 ‘매우 그렇다’가 92명(26.7%), ‘보통이다’가 24명(6.9%), ‘그렇

지 않다'가 57명(16.5%), '전혀 그렇지 않다'가 23명(6.7%)의 순서로 나타났고, 전체 345명 중 241명(69.9%)이 무상급식의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취학자녀에 $P<0.05$ 에서, 학교급별에 $P<0.001$ 에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현길아(2013)에서는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서 '필요하다'가 57명(34.3%), '매우 필요하다'가 49명(29.5%)의 순서로 응답하여 전체 166명 중 106명(63.9%)이 전면 학교무상급식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본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들은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0. 학교 무상급식의 필요성

분류	전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i>p</i> -value
성 별	남	141(40.9)	46(13.3)	60(17.4)	8(2.3)	22(6.4)	0.118
	여	204(59.1)	46(13.3)	89(25.8)	16(4.6)	35(10.1)	
연 령	만30세 미만	38(11.0)	8(2.3)	20(5.8)	3(0.9)	5(1.4)	0.050
	만30-40세	90(26.1)	31(34.4)	44(48.9)	3(3.3)	9(10.0)	
	만41세-50세	115(33.3)	31(9.0)	51(14.8)	8(2.3)	18(5.2)	
	만51세 이상	102(29.6)	22(6.4)	34(9.9)	10(2.9)	25(7.2)	
직 위	교사	242(70.1)	65(18.8)	108(31.3)	16(4.6)	41(11.9)	0.126
	행정직	34(9.9)	8(2.3)	19(5.5)	2(0.6)	4(1.2)	
	기타 ¹⁾	69(20.0)	19(5.5)	22(6.4)	6(1.7)	12(3.5)	
근 무 경 력	5년 이하	71(20.6)	18(5.2)	35(10.1)	6(1.7)	8(2.3)	0.225
	6년-10년	84(24.3)	23(6.7)	37(10.7)	5(1.4)	11(3.2)	
	11-20년	102(29.6)	30(8.7)	47(13.6)	3(0.9)	16(4.6)	
	21년 이상	88(25.5)	21(6.1)	30(8.7)	10(2.9)	22(6.4)	
취 학 자 녀	있다	158(45.8)	45(13.0)	79(22.9)	8(2.3)	20(5.8)	0.024*
	없다	187(54.2)	47(13.6)	70(20.3)	16(4.6)	37(10.7)	
학 교 급 별	초등학교	86(24.9)	16(4.6)	58(16.8)	1(0.3)	10(2.9)	0.000***
	중학교	114(33.0)	27(7.8)	39(11.3)	14(4.1)	20(5.8)	
	고등학교	109(31.6)	28(8.1)	42(12.2)	7(2.0)	24(7.0)	
	특수학교	36(10.4)	21(6.1)	10(2.9)	2(0.6)	3(0.9)	
	계	345(100.0)	92(26.7)	149(43.2)	24(6.9)	57(16.5)	

¹⁾ 교육 공무원 및 방과 후 강사 * $p<0.05$, *** $p<0.001$ N(%)

표10의 무상급식이 필요한가의 질문에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긍정 답변을 한 교직원들은 무상급식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94명(27.3%)의 교직원이 ‘차별 없는 동등한 식사’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 제공’ 83명(24.1%)과 ‘의무교육의 일환’ 59명(17.1%),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어서’ 5명(11.4%)으로 나타났으며, 현길아(2013)에서는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 42명(38.9%), ‘국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 31명(28.7%),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 22명(20.4%), ‘무상급식으로 학부모님의 소득 격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 13명(12.0%)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다소의 문항 차이가 있으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며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차별 없는 동등한 식사와 교육복지 서비스의 확대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11. 학교무상급식이 필요한 이유

(N=241)		
유호	빈도 (명)	퍼센트 (%)
의무교육 일환	59	17.1
균형 잡힌 식사 제공	83	24.1
차별 없는 동등한 식사	94	27.3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어서	5	1.4
합계	241	69.9

표12는 무상급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직원의 응답에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선별해 돕는 선택적 복지’가 31명(9.0%)이며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불필요하기 때문’ 29명(8.4%), ‘타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 13명(3.8%)순으로 나타났다.

표12. 무상급식이 불필요한 이유

유효	(N=80)	
	빈도 (명)	퍼센트 (%)
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13	3.8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불필요	29	8.4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성이 낮음	1	0.3
학교급식 식단에 불만족	6	1.7
선별적 지원이 타당함	31	9.0
합계	80	23.2

표13은 ‘무상교육 범위에 급식비를 포함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반드시 포함 한다’ 74명(21.4%)이며, ‘포함 한다’가 138명(40.0%), ‘잘 모르겠다’가 24명(7.0%), ‘포함 안 한다’가 95명(27.5%), ‘절대 포함 안 한다’가 14명(4.1%)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학교급별에 $P < 0.01$ 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무상교육 범위에 급식비의 포함 여부에 대해 ‘반드시 포함 한다’와 ‘포함 한다’의 응답에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51명(14.8%),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66명(19.2%),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64명(18.6%), 특수학교 교직원은 31명(9.0%)로 나타났다.

표13. 무상교육 범위에 급식비를 포함해야 하는가

분류	전체	반드시	포함	잘	포함	절대	p-value	
		포함 한다.	한다.	모르겠다.	안 한다.	포함 안 한다.		
직 위	교사	242(70.1)	47(13.6)	105(30.4)	14(4.1)	69(20.0)	7(2.0)	0.198
	행정직	34(9.9)	8(2.3)	13(3.8)	3(0.9)	9(2.6)	1(0.3)	
	기타 ¹⁾	69(20.0)	19(5.5)	20(5.8)	7(2.0)	17(4.9)	6(1.7)	
취 학 자 녀	있다	158(45.8)	40(11.6)	62(18.0)	5(1.4)	46(13.3)	5(1.4)	0.063
	없다	187(54.2)	34(9.9)	76(22.0)	19(5.5)	49(14.2)	9(2.6)	
학 교 급 별	초등학교	86(24.9)	11(3.2)	40(11.6)	2(0.6)	31(9.0)	2(0.6)	0.002**
	중학교	114(33.0)	24(7.0)	42(12.2)	9(2.6)	33(9.6)	6(1.7)	
	고등학교	109(31.6)	22(6.4)	42(12.2)	10(2.9)	29(8.4)	6(1.7)	
	특수학교	36(10.4)	17(4.9)	14(4.1)	3(0.9)	2(0.6)	0(0)	
계	345(100.0)	74(21.4)	138(40.0)	24(7.0)	95(27.5)	14(4.1)		

¹⁾ 교육 공무원 및 방과 후 강사 ** p<0.01 N(%)

표14는 ‘무상급식의 대상은 어느 범위까지가 적당 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고등학생’까지 161명(46.7%)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까지 100명(29.0%), ‘초등학생’까지 70명(20.3%), ‘유치원생’까지 12명(3.5%), ‘대학생’까지 2명(0.6%)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학교급별에 P<0.01에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현길아(2013)에서는 문항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중학생’까지 64명(38.6%)으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생’까지 52명(31.3%), ‘고등학생’까지 50명(30.1%)로 무상급식 대상 범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본 연구와 현길아(2013)에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각각의 조사 시점에 당시 무상급식의 대상자 범위에 따른 것이라 본다. 현길아(2013)에는 무상급식 대상 범위가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

기 때문에 ‘중학생’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14. 무상급식의 대상자는 어느 범위까지가 적당 한가

분류	전체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p-value
직위	교사	242(70.1)	5(1.4)	49(14.2)	67(19.4)	120(34.8)	0.265
	행정직	34(9.9)	2(0.6)	7(2.0)	14(4.1)	11(3.2)	
	기타 ¹⁾	69(20.0)	5(1.4)	14(4.1)	19(5.5)	30(8.7)	
취학자녀	있다	158(45.8)	3(0.9)	32(9.3)	38(11.0)	84(24.3)	0.126
	없다	187(54.2)	9(2.6)	38(11.0)	62(18.0)	77(22.3)	
학교급별	초등학교	86(24.9)	3(0.9)	16(4.6)	22(6.4)	44(12.8)	0.001**
	중학교	114(33.0)	7(2.0)	30(8.7)	43(12.5)	34(9.9)	
	고등학교	109(31.6)	2(0.6)	22(6.4)	30(8.7)	54(15.7)	
	특수학교	36(10.4)	0(0)	2(0.6)	5(1.4)	29(8.4)	
계	345(100.0)	12(3.5)	70(20.3)	100(29.0)	161(46.7)	2(6)	

¹⁾ 교육 공무원 및 방과 후 강사 ** p<0.01, N(%)

표15는 무상급식이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76명(22.0%)이며 ‘그렇다’가 148명(42.9%), ‘보통이다’가 65명(18.8%), ‘그렇지 않다’가 39명(11.3%), ‘전혀 그렇지 않다’가 17명(4.9%)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취학자녀에 P<0.01에서 학교급별에 P<0.001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무상급식이 교육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응답이 81.4%,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52.6%, 고등학

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60.5%로 초등학교 교직원이 교육에 도움을 주는 정도가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최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영양(교)사가 수업, 동아리 등의 영양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교급식의 교육적 측면이 교직원들의 인식에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는 교직원들에게 무상급식이 교육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높게 나타난 이유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15. 무상급식이 교육에 도움을 주는가

구분	전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p-value
직 위	교사	242(70.1)	52(21.5)	103(42.6)	42(17.4)	32(13.2)	0.638
	행정직	34(9.9)	9(26.5)	16(47.1)	7(20.6)	2(5.9)	
	기타	69(20.0)	15(21.7)	29(42.0)	16(23.2)	5(7.2)	
취 학 자 녀	있다	158(45.8)	33(20.9)	80(50.6)	16(10.1)	19(12.0)	0.002**
	없다	187(54.2)	43(23.0)	68(36.4)	49(26.2)	20(10.7)	
학 교 급 별	초등학교	86(24.9)	14(16.3)	56(65.1)	7(8.1)	6(7.0)	0.000***
	중학교	114(33.0)	22(19.3)	38(33.3)	32(28.1)	16(14.0)	
	고등학교	109(31.6)	23(21.1)	43(39.4)	18(16.5)	17(15.6)	
	특수학교	36(10.4)	17(47.2)	11(30.6)	8(22.2)	0(0.0)	
계	345(100.0)	76(22.0)	148(42.9)	65(18.8)	39(11.3)	17(4.9)	

1) 교육 공무원 및 방과 후 강사 **p<0.01, ***p<0.001 N(%)

표16은 무상급식의 교육적 역할에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답을 한 교직원들의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소득 격차 없이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식사’ 158명(45.8%)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는 것 자체가 교육’과 ‘편식 교정, 올바른 식사 예절 및 규칙을 알게 해줌’ 순서로 나타났다.

표16. 무상급식의 교육적 역할

(N=224)

유효	빈도 (명)	퍼센트 (%)
소득 격차 없이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식사	158	45.8
편식 교정, 올바른 식사 예절 및 규칙을 알게 해줌	27	7.8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는 것 자체가 교육	32	9.3
배고픔을 없애 결식의 우려에서 도움	5	1.4
친구를 사귀고 다른 교육에 도움	2	0.6
합계	224	64.9

표17은 무상급식이 교육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식사를 제공 받는 것이지 교육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 35명 (10.1%)으로 가장 많으며 ‘국가의 사회 복지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과 ‘급식을 하기 싫은 학생도 강제로 먹어야 해서’ 순서로 나타났으며, 교직원들의 인식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 받는 것이지 교육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표17. 무상급식이 교육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N=56)

유효	빈도 (명)	퍼센트 (%)
단순히 식사를 제공 받는 것일 뿐이다.	35	10.1
급식에 제공되는 식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	0.3
급식을 하기 싫은 학생도 강제로 먹어야 해서	3	0.9
국가의 사회 복지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	17	4.9
합계	56	16.2

3. 학교무상급식의 복지적 측면에 대한 인식

표17은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에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 ‘매우 도움을 준다’ 81명(23.5%)이며 ‘도움을 준다’가 141명(40.9%), ‘보통이다’가 60명(17.4%), ‘도움을 주지 않는다’가 44명(12.8%),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가 19명(5.5%)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연령에 $P<0.05$ 에서 학교급별에 $P<0.001$ 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전체 연령에서 보면 41세~50세 115명(33.3%), 51세 이상 102명(29.6%)로 40세 이상의 취학자녀가 있는 연령에서 217명(62.9%)으로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무상급식의 보편적 복지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 ‘매우 도움을 준다’와 ‘도움을 준다’의 응답이 68명(19.7%),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53명(15.4%),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76명(22.0%),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25명(7.2%)로 나타났다.

표18.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에 도움을 주는가

성 별	분류	전체	매우	도움을	보통	도움을	전혀	p-value
			도움을 준다	준다	이다	주지 않는다	도움을 주지 않는다	
성 별	남	141(40.9)	40(11.6)	59(17.1)	22(6.4)	15(4.3)	5(1.4)	0.246
	여	204(59.1)	41(11.9)	82(23.8)	38(11.0)	29(8.4)	14(4.1)	
연 령	만30세 미만	38(11.0)	8(2.3)	18(5.2)	4(1.2)	6(1.7)	2(0.6)	0.016*
	만30-40세	90(7.8)	27(7.8)	38(11.0)	14(4.1)	8(2.3)	3(0.9)	
	만41세-50세	115(33.3)	31(9.0)	52(15.1)	17(4.9)	8(2.3)	7(2.0)	
	만51세 이상	102(29.6)	15(4.3)	33(9.6)	25(7.2)	22(6.4)	7(2.0)	
직 위	교사	242(70.1)	55(15.1)	103(29.9)	43(12.2)	29(9.3)	12(3.8)	0.473
	행정직	34(9.9)	8(2.6)	16(4.6)	6(2.0)	4(0.6)	0(0)	
	기타 ¹⁾	69(20.0)	18(4.3)	22(8.4)	11(4.6)	11(1.4)	7(1.2)	
근 무 경 력	5년 이하	71(20.6)	17(4.9)	29(8.4)	13(3.8)	10(2.9)	2(0.6)	0.335
	6년-10년	84(24.3)	21(6.1)	34(9.9)	14(4.1)	9(2.6)	6(1.7)	
	11-20년	102(29.6)	26(7.5)	50(14.5)	12(3.5)	10(2.9)	4(1.2)	
	21년 이상	88(25.5)	17(4.9)	28(8.1)	21(6.1)	15(4.3)	7(2.0)	
취 학 자 녀	있다	158(45.8)	40(11.6)	68(19.7)	27(7.8)	14(4.1)	9(2.6)	0.373
	없다	187(54.2)	41(11.9)	73(21.2)	33(9.6)	30(8.7)	10(2.9)	
학 교 급 별	초등학교	86(24.9)	16(4.6)	52(15.1)	11(3.2)	4(1.2)	3(0.9)	0.000***
	중학교	114(33.0)	20(5.8)	33(9.6)	30(8.7)	23(6.7)	8(2.3)	
	고등학교	109(31.6)	28(8.1)	48(13.9)	11(3.2)	14(4.1)	8(2.3)	
	특수학교	36(10.4)	17(4.9)	8(2.3)	8(2.3)	3(0.9)	0(0)	
	계	345(100.0)	81(23.5)	141(40.9)	60(17.4)	44(12.8)	19(5.5)	

¹⁾ 교육 공무원 및 방과 후 강사 *p<0.05, ***p<0.001 N(%)

표19는 전면 무상급식의 문제점에 대해 ‘예산부족’ 177명(51.3%)이며 ‘국민의 조세 부담 가중’이 62명(18.0%), ‘세금낭비’가 21명(6.1%), ‘다른 교육의 우선적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47명(13.6%), ‘국가에 대한 복지의존성향’ 38명(11.0%)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직위에 P<0.01에서 학교급별에 P<0.001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직위에서 ‘예산 부족’ 응답이 교사 126명(36.5%), 행정직 24명

(7.0%), 기타 27명(20.0%)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에서는 ‘예산 부족’ 응답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54명(15.7%),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37명(10.7%),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67명(19.4%),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19명(5.5%)로 나타났다.

표19. 보편적 무상급식의 문제점

분류	전체	예산 부족	조세 부담	세금 낭비	다른 교육비 예산 배정에 방해	국가에 대한 복지 의존 성향 (복지병) 증가	p-value
직 위	교사	242(70.1)	126(36.5)	37(10.7)	11(3.2)	39(11.3)	0.001**
	행정직	34(9.9)	24(7.0)	7(2.0)	0(0.0)	2(0.6)	
	기타 ¹⁾	69(20.0)	27(7.8)	18(5.2)	10(2.9)	6(1.7)	
취 학 자 녀	있다	158(45.8)	87(25.2)	31(9.0)	10(2.9)	15(4.3)	0.237
	없다	187(54.2)	90(26.1)	31(9.0)	11(3.2)	32(9.3)	
학 교 급 별	초등학교	86(24.9)	54(15.7)	18(5.2)	4(1.2)	7(2.0)	0.000***
	중학교	114(33.0)	37(10.7)	23(6.7)	12(3.5)	22(6.4)	
	고등학교	109(31.6)	67(19.4)	12(3.5)	5(1.4)	14(4.1)	
	특수학교	36(10.4)	19(5.5)	9(2.6)	0(0.0)	4(1.2)	
계	345(100.0)	177(51.3)	62(18.0)	21(6.1)	47(13.6)	38(11.0)	

¹⁾ 교육 공무원 및 방과 후 강사 ** p<0.01, ***p<0.001 N(%)

4. 학교무상급식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인식

표20은 세금이 증가해도 무상급식을 찬성 하는가에 대해 ‘매우 찬성 한다’ 27명 (7.8%)이며 ‘찬성 한다’가 84명(24.3%), ‘보통이다’가 106명(30.7%), ‘반대 한다’가 94명(27.2%), ‘매우 반대 한다’가 34명(9.9%)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연령, 직위에 $P<0.05$ 에서 학교급별에 $P<0.001$ 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현길아 (2013)에서는 세금이 증가해도 무상급식을 찬성 하는가에 대해 ‘매우 찬성 한다’ 13명(7.8%)이며 ‘찬성 한다’가 51명(30.7%), ‘보통이다’가 51명(30.7%), ‘반대 한다’가 33명(20.0%), ‘매우 반대 한다’가 18명(10.8%)로 ‘보통이다’를 중심으로 ‘찬성 한다’와 ‘반대 한다’에 대해 동일한 분포도를 보여 본 연구 결과와 같은 양상을 나타냈다.

표20. 세금이 증가해도 무상급식을 찬성 하는가

분류	전체	매우	찬성	보통	반대	매우	p-value	
		찬성한다.	한다.	이다.	한다.	반대한다.		
성별	남	141(40.9)	14(4.1)	36(10.4)	42(12.2)	38(11.0)	11(3.2)	0.630
	여	204(59.1)	13(3.8)	48(13.9)	64(18.6)	56(16.2)	23(6.7)	
연령	만30세미만	38(11.0)	2(0.6)	8(2.3)	15(4.3)	10(2.9)	3(0.9)	0.023*
	만30-40세	90(26.1)	13(3.8)	29(8.4)	28(8.1)	15(4.3)	5(1.4)	
	만41세-50세	115(33.3)	6(1.7)	30(8.7)	30(8.7)	38(11.0)	11(3.2)	
	만51세이상	102(29.6)	6(1.7)	17(4.9)	33(9.6)	31(9.0)	15(4.3)	
직위	교사	242(70.1)	21(6.1)	67(19.4)	76(22.0)	62(18.0)	16(4.6)	0.014*
	행정직	34(9.9)	3(0.9)	6(1.7)	12(3.5)	10(2.9)	3(0.9)	
	기타 ¹⁾	69(20.0)	3(0.9)	11(3.2)	18(5.2)	22(6.4)	15(4.3)	
근무경력	5년이하	71(20.6)	6(1.7)	13(3.8)	27(7.8)	20(5.8)	5(1.4)	0.663
	6년-10년	84(24.3)	9(2.6)	24(7.0)	22(6.4)	21(6.1)	8(2.3)	
	11-20년	102(29.6)	7(2.0)	26(7.5)	34(9.9)	27(7.8)	8(2.3)	
	21년이상	88(25.5)	5(1.4)	21(6.1)	23(6.7)	26(7.5)	13(3.8)	
취학자녀	있다	158(45.8)	10(2.9)	37(10.7)	52(15.1)	41(11.9)	18(5.2)	0.686
	없다	187(54.2)	17(4.9)	47(13.6)	54(15.7)	53(15.4)	16(4.6)	
학교급별	초등학교	86(24.9)	5(1.4)	9(2.6)	35(10.1)	30(8.7)	7(2.0)	0.000***
	중학교	114(33.0)	8(2.3)	24(7.0)	37(10.7)	27(7.8)	18(5.2)	
	고등학교	109(31.6)	12(3.5)	33(9.6)	22(6.4)	34(9.9)	8(2.3)	
	특수학교	36(10.4)	2(0.6)	18(5.2)	12(3.5)	3(0.9)	1(0.3)	
계	345(100.0)	27(7.8)	84(24.3)	106(30.7)	94(27.2)	34(9.9)		

¹⁾ 교육 공무원 및 방과 후 강사 * $p<0.05$, *** $p<0.001$ N(%)

표21에 세금이 증가해도 무상급식을 찬성 하는가에 대해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한다’의 답을 한 교직원들은 세금이 증가해도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더 나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가 49명(44.1%) 가장 많으며 ‘국가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42명(37.8%)와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함’ 14명(12.6%) 순서로 나타났으며 문항에 차이가 있으나 현길아(2013)에서는 세금이 증가해도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에 ‘국가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 42명(57.5%), ‘국가의 재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27명(36.9%), ‘무상급식을 세금으로 증가해서까지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 2명(2.8%),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세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 2명(2.8%)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었다.

표21. 세금이 증가해도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이유

유호	(N=111)	
	빈도 (명)	퍼센트 (%)
국가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42	37.8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함	14	12.6
더 나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49	44.1
더 나은 급식의 질을 위하여	6	5.4
합계	111	100.0

표22는 세금이 증가해도 무상급식을 찬성 하는가에 대해 ‘매우 반대 한다’, ‘반대 한다’의 답을 한 교직원들은 세금이 증가해도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에 ‘무상급식을 증세까지 해서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5명(43.0%)이며 ‘일시적으로 내는 세금의 증가로는 지속적 유지에 한계가 있으므로’이 11.9(32.0%), ‘국가의 현재 재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6명(20.3%)순으로 나타났다. 현길아(2013)에서는 세금이 증가해도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에 ‘국민의 일시적인 세금 증가는 불가피하므로’ 23명(23%), ‘더 나은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 16명(16%)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더 나은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 세금이 증가해도 무상급식을

찬성하였고, 반대로 현길아(2013)에서는 ‘더 나은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 무상급식을 세금이 증가하면서까지 하는 것을 반대하여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표22. 세금 증가 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

유효	(N=128)	
	빈도 (명)	퍼센트 (%)
일시적으로 내는 세금의 증가로는 지속적 유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현재 재원으로	41	32.0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증세까지 해서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6	20.3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세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55	43.0
합계	6	4.7
	128	100.0

5. 학교무상급식의 현안에 대한 인식

표23는 무상급식은 급식의 질을 저하 시킨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13명(3.8%)이며 ‘그렇다’가 58명(16.8%), ‘보통이다’가 72명(20.9%), ‘그렇지 않다’가 122명(35.4%), ‘전혀 그렇지 않다’가 80명(23.2%)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직위에 $P<0.05$ 에서 학교급별에 $P<0.001$ 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무상급식이 급식의 질을 저하 시킨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응답이 58명(16.8%),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76명(22.0%),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50명(14.5%), 특수학교 교직원들은 18명(5.2%)로 나타났다.

표23. 무상급식은 급식의 질을 저하 시킨다고 생각 하는가

구분	전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p-value	
직위	교사	242(70.1)	9(2.6)	47(13.6)	46(13.3)	94(27.2)	46(13.3)	0.045*
	행정직	34(9.9)	1(0.3)	4(1.2)	8(2.3)	7(2.0)	14(4.1)	
	기타 ¹⁾	69(20.0)	3(0.9)	7(2.0)	18(5.2)	21(6.1)	20(5.8)	
취 학 자 녀	있다	158(45.8)	7(2.0)	28(8.1)	29(8.4)	53(15.4)	41(11.9)	0.627
	없다	187(54.2)	6(1.7)	30(8.7)	43(12.5)	69(20.0)	39(11.3)	
학 교 급 별	초등학교	86(24.9)	1(0.3)	9(2.6)	18(5.2)	43(12.5)	15(4.3)	0.000***
	중학교	114(33.0)	3(0.9)	11(3.2)	24(7.0)	41(11.9)	35(10.1)	
	고등학교	109(31.6)	6(1.7)	32(9.3)	21(6.1)	31(9.0)	19(5.5)	
	특수학교	36(10.4)	3(0.9)	6(1.7)	9(2.6)	7(2.0)	11(3.2)	
계	345(100.0)	13(3.8)	58(16.8)	72(20.9)	122(35.4)	80(23.2)		

¹⁾ 교육 공무원 및 방과 후 강사 *p<0.05, ***p<0.001 N(%)

표24은 무상급식이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절감에 효과를 주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54명(15.7%)이며 ‘그렇다’가 168명(48.7%), ‘보통이다’가 65명(18.8%), ‘그렇지 않다’가 37명(10.7%), ‘전혀 그렇지 않다’가 21명(6.1%)로 나타났다. 교직원 들은 무상급식이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학교급별에 P<0.01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표24. 무상급식이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절감 효과를 주는가

구분	전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p-value
직 위	교사	242(70.1)	36(10.4)	125(36.2)	44(12.8)	25(7.2)	0.331
	행정직	34(9.9)	9(2.6)	15(4.3)	4(1.2)	4(1.2)	
	기타 ¹⁾	69(20.0)	9(2.6)	28(8.1)	17(4.9)	8(2.3)	
취 학 자 녀	있다	158(45.8)	30(8.7)	76(22.0)	26(7.5)	18(5.2)	0.463
	없다	187(54.2)	24(7.0)	92(26.7)	39(11.3)	19(5.5)	
학 교 급 별	초등학교	86(24.9)	9(2.6)	60(17.4)	9(2.6)	7(2.0)	0.004**
	중학교	114(33.0)	18(5.2)	47(13.6)	24(7.0)	14(4.1)	
	고등학교	109(31.6)	19(5.5)	47(13.6)	23(6.7)	15(4.3)	
	특수학교	36(10.4)	8(2.3)	14(4.1)	9(2.6)	1(0.3)	
계	345(100.0)	54(15.7)	168(48.7)	65(18.8)	37(10.7)	21(6.1)	

¹⁾ 교육 공무원 및 방과 후 강사 **p<0.01 N(%)

표25는 다른 교육비 삭감이 일어나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33명(9.6%)이며 ‘그렇다’가 119명(34.5%), ‘보통이다’가 75명(21.7%), ‘그렇지 않다’가 80명(23.2%), ‘전혀 그렇지 않다’가 38명(11.0%)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학교급별에 P<0.001에서 학교급별에 P<0.001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표25. 다른 교육비 삭감이 일어나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가

분류	전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p-value	
직 위	교사	242(70.1)	22(6.4)	94(27.2)	53(15.4)	53(15.4)	20(5.8)	0.037
	행정직	34(9.9)	5(1.4)	11(3.2)	6(1.7)	9(2.6)	3(0.9)	
	기타 ¹⁾	69(20.0)	6(1.7)	14(4.1)	16(4.6)	18(5.2)	15(4.3)	
취 학 자 녀	있다	158(45.8)	16(4.6)	66(19.1)	32(9.3)	28(8.1)	16(4.6)	0.065
	없다	187(54.2)	17(4.9)	53(15.4)	43(12.5)	52(15.1)	22(6.4)	
학 교 급 별	초등학교	86(24.9)	4(1.2)	39(11.3)	21(6.1)	14(4.1)	8(2.3)	0.000***
	중학교	114(33.0)	10(2.9)	25(7.2)	27(7.8)	34(9.9)	18(5.2)	
	고등학교	109(31.6)	8(2.3)	40(11.6)	24(7.0)	26(7.5)	11(3.2)	
	특수학교	36(10.4)	11(3.2)	15(4.3)	3(0.9)	6(1.7)	1(0.3)	
계	345(100.0)	33(9.6)	119(34.5)	75(21.7)	80(23.2)	38(11.0)		

¹⁾ 교육 공무원 및 방과 후 강사 ***p<0.001 N(%)

표26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무상급식을 공약화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옳다’ 38명 (11.0%)이며 ‘옳다’가 76명(22.0%), ‘보통이다’가 71명(20.6%), ‘옳지 않다’가 113명 (32.8%), ‘매우 옳지 않다’가 47명(13.6%)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직위와 학교급별에 P<0.001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표26. 정당과 정치인들의 무상급식 공약을 옳다고 생각 하는가

분류	전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p-value
직 위	교사	242(70.1)	23(6.7)	52(15.1)	54(15.7)	88(25.5)	0.004**
	행정직	34(9.9)	6(1.7)	12(3.5)	4(1.2)	9(2.6)	
	기타 ¹⁾	69(20.0)	9(2.6)	12(3.5)	13(3.8)	16(4.6)	
취 학 자 녀	있다	158(45.8)	21(6.1)	40(11.6)	29(8.4)	52(15.1)	0.190
	없다	187(54.2)	17(4.9)	36(10.4)	42(12.2)	61(17.7)	
학 교 급 별	초등학교	86(24.9)	7(2.0)	18(5.2)	17(4.9)	34(9.9)	0.003**
	중학교	114(33.0)	11(3.2)	21(6.1)	28(8.1)	33(9.6)	
	고등학교	109(31.6)	10(2.9)	24(7.0)	18(5.2)	43(12.5)	
	특수학교	36(10.4)	10(2.9)	13(3.8)	8(2.3)	3(0.9)	
계	345(100.0)	38(11.0)	76(22.0)	71(20.6)	113(32.8)	47(13.6)	

¹⁾ 교육 공무원 및 방과 후 강사 **p<0.01 N(%)

표27은 학교무상급식은 전략적 복지 포폴리즘 인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40명(11.6%)이며 ‘그렇다’가 142명(41.2%), ‘보통이다’가 66명(19.1%), ‘그렇지 않다’가 54명(15.7%), ‘전혀 그렇지 않다’가 43명(12.5%)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에 학교급별에 P<0.01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표27. 학교무상급식은 전략적인 표플리즘 인가

분류	전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p-value
직 위	교사	242(70.1)	27(7.8)	106(30.7)	44(12.8)	37(10.7)	0.518
	행정직	34(9.9)	4(1.2)	11(3.2)	7(2.0)	9(2.6)	
	기타 ¹⁾	69(20.0)	9(2.6)	25(7.2)	15(4.3)	8(2.3)	
취 학 자 녀	있다	158(45.8)	17(4.9)	72(20.9)	26(7.5)	25(7.2)	0.572
	없다	187(54.2)	23(6.7)	70(20.3)	40(11.6)	29(8.4)	
학 교 급 별	초등학교	86(24.9)	3(0.9)	46(13.3)	19(5.5)	12(3.5)	0.001**
	중학교	114(33.0)	20(5.8)	37(10.7)	26(7.5)	15(4.3)	
	고등학교	109(31.6)	14(4.1)	50(14.5)	12(3.5)	22(6.4)	
	특수학교	36(10.4)	3(0.9)	9(2.6)	9(2.6)	5(1.4)	
계	345(100.0)	40(11.6)	142(41.2)	66(19.1)	54(15.7)	43(12.5)	

¹⁾ 교육 공무원 및 방과 후 강사

²⁾ 포플리즘(populism) :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함.

**p<0.01 N(%)

표28은 영양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에 대해 ‘올바른 식습관과 식사예절을 교육’ 146명(42.3%), ‘평생건강을 위한 단계별 영양 교육’ 139명(40.3%)이며 ‘바른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 46명(13.3%), ‘식단을 직접 작성하고 요리를 실습하는 체험 교육’이 11명(3.2%), ‘식품 알러지 및 특이체질 학생 등의 식이요법 상담’ 3명(0.9%)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취학자녀와 학교급별에 P<0.05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표28. 안정적인 무상급식의 제도화를 위한 영양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분류	전체	평생	올바른	바른	식이상	실습하	p-value	
		건강을 위한 영양 교육	식습관 과 식사 예절 교육					먹거리 교육
성별	남	141(40.9)	59(17.1)	58(16.8)	17(4.9)	3(0.9)	4(1.2)	0.293
	여	204(59.1)	80(23.2)	88(25.2)	29(8.4)	0(0)	7(2.0)	
연령	만30세미만	38(11.0)	9(2.6)	23(6.7)	3(0.9)	0(0)	3(0.9)	0.079
	만30-40세	90(26.1)	43(12.5)	34(9.9)	9(2.6)	1(0.3)	3(0.9)	
	만41세-50세	115(33.3)	52(15.1)	44(12.8)	18(5.2)	0(0)	1(0.3)	
	만51세이상	102(29.6)	35(10.1)	45(13.0)	16(4.6)	2(0.6)	4(1.2)	
직위	교사	242(70.1)	101(29.3)	96(27.8)	33(9.6)	2(0.6)	10(2.9)	0.524
	행정직	34(9.9)	13(3.8)	17(4.9)	3(0.9)	1(0.3)	0(0.0)	
	기타 ¹⁾	69(20.0)	25(7.2)	33(9.6)	10(2.9)	0(0)	1(0.3)	
근무경력	5년이하	71(20.6)	24(7.0)	37(10.7)	6(1.7)	0(0)	4(1.2)	0.156
	6년-10년	84(24.3)	39(11.3)	32(9.3)	10(2.9)	2(0.6)	1(0.3)	
	11-20년	102(29.6)	48(13.9)	35(10.1)	16(4.6)	0(0)	3(0.9)	
	21년이상	88(25.5)	28(8.1)	42(12.2)	14(4.1)	1(0.3)	3(0.9)	
취학자녀	있다	158(45.8)	75(47.5)	52(32.9)	24(15.2)	1(0.6)	6(3.8)	0.025*
	없다	187(54.2)	64(34.2)	94(50.3)	22(11.8)	2(1.1)	5(2.7)	
학교급별	초등학교	86(24.9)	38(11.0)	33(9.6)	14(4.1)	0(0)	1(0.3)	0.013*
	중학교	114(33.0)	35(10.1)	57(16.5)	17(4.9)	0(0)	5(1.4)	
	고등학교	109(31.6)	47(13.6)	48(13.9)	10(2.9)	1(0.3)	3(0.9)	
	특수학교	36(10.4)	19(5.5)	8(2.3)	5(1.4)	2(0.6)	2(0.6)	
계		345(100.0)	139(40.3)	146(42.3)	46(13.3)	3(0.9)	11(3.2)	

¹⁾ 교육 공무원 및 방과 후 강사 *p<0.05 N(%)

표29는 무상급식 신뢰도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식재료 유통망을 확보하여 안전한 급식재료 사용’ 199명(57.7%)이며

‘올바른 식생활 문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로 이미지 개선’이 81명(23.5%), ‘충분한 예산 확보’가 28명(8.1%), ‘식단과 조리법을 개발하여 급식의 질 향상’이 20명(5.8%), ‘공동구매 등을 통한 식재료 단가 낮추기’가 17명(4.9%)으로 나타났다. .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학교급별에 $P < 0.001$ 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표29. 무상급식 신뢰도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 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류	전체	믿을 수	올바른	식재료	충분한	식단과	p-value
		있는	식생활	단가	예산확보	조리법	
		식재료	교육과	낮추기		개발	
		유통망	홍보				
성	남	141(40.9)	82(23.8)	36(10.4)	6(1.7)	10(2.9)	0.970
	여	204(59.1)	117(33.9)	45(13.0)	11(3.2)	18(5.2)	
연	만30세미만	38(11.0)	19(5.5)	7(2.0)	2(0.6)	5(1.4)	0.140
	만30-40세	90(26.1)	54(15.7)	23(6.7)	5(1.4)	4(1.2)	
	만41세-50세	115(33.3)	67(19.4)	23(6.7)	3(0.9)	15(4.3)	
	만51세이상	102(29.6)	59(17.1)	28(8.1)	7(2.0)	4(1.2)	
직	교사	242(70.1)	147(42.6)	55(15.9)	10(2.9)	15(4.3)	0.091
	행정직	34(9.9)	21(6.1)	8(2.3)	2(0.6)	1(0.3)	
	기타 ¹⁾	69(20.0)	31(9.0)	18(5.2)	5(1.4)	12(3.5)	
근	5년이하	71(20.6)	36(10.4)	16(4.6)	5(1.4)	8(2.3)	0.059
	6년-10년	84(24.3)	46(13.3)	22(6.4)	3(0.9)	6(1.7)	
	11-20년	102(29.6)	58(16.8)	24(7.0)	3(0.9)	14(4.1)	
	21년이상	88(25.5)	59(17.1)	19(5.5)	6(1.7)	0(0.0)	
취	있다	158(45.8)	98(28.2)	31(9.0)	6(1.7)	15(4.3)	0.341
	없다	187(54.2)	101(29.1)	50(14.4)	11(3.1)	13(3.7)	
학	초등학교	86(24.9)	61(17.7)	7(2.0)	1(0.3)	8(2.3)	0.000***
	중학교	114(33.0)	60(17.4)	34(9.9)	5(1.4)	11(3.2)	
	고등학교	109(31.6)	66(19.1)	23(6.7)	8(2.3)	9(2.6)	
	특수학교	36(10.4)	12(3.5)	17(4.9)	3(0.9)	0(0.0)	
계		345(100.0)	199(57.7)	81(23.5)	17(4.9)	28(8.1)	20(5.8)

¹⁾ 교육 공무원 및 방과 후 강사 ***p<0.001 N(%)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 지역 학교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의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 실태를 연구하고 하고 무상급식의 효율적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급식 운영의 관리 측면에서 무상급식이 필요한가의 질문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긍정 답변은 조사자 345명 중 241명 (69.9%)이며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차별 없는 동등한 식사’가 94명 (27.3%)으로 가장 많으며 ‘균형 잡힌 식사 제공’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순서로 나타났다. 무상교육 범위에 급식비를 포함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포함 한다’, ‘반드시 포함 한다’의 긍정 답변은 214명 (61.4%)였고, 무상급식의 대상자는 어느 범위까지가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고등학생’까지 161명(46.7%) 무상급식이 교육에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긍정 답변이 224명(64.9%) 이며, 무상급식이 주는 가장 큰 도움은 ‘소득 격차 없이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식사’가 158명 (45.8%) 가장 많았다.

둘째, 무상급식의 복지적 측면에서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에 도움을 주는 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 답변인 ‘매우 도움을 준다’ 81명(23.5%)이며 ‘도움을 준다’가 141명(40.9%)로 222명 (64.4%)이 도움을 준다 라고 응답하였다. 전면 무상급식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177명(51.3%)가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국민의 조세부담 가중’이 62명(18.0%), ‘세금낭비’가 21명 (6.1%), ‘다른 교육의 우선적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47명(13.6%), ‘국가에 대한 복지의존성향’ 38명 (11.0%)로 나타났다.

셋째, 무상급식의 재정적 측면에서 무상급식이 세금이 증가가 이루어져도 찬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 한다’ 27명(7.8%)이며 ‘찬성 한다’가 82명(24.3%)로 109명(32.1%)가 찬성 응답하였고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나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가 49명(44.1%) 응답하였고,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상급식을 증세까지 해서 하는 것은 낭비’라는 응답이 55명(43%) 나타났다.

넷째, 무상급식 운영에 대한 현안 인식에서 무상급식은 급식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122명(35.4%), ‘전혀 그렇지 않다’가 80명(23.2%)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이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절감 효과를 주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54명(15.7%)이며 ‘그렇다’가 168명(48.7%)으로 교육비 절감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였다. 정치인이나 정당에서 무상급식을 공약화 하는 것에 대하여 옳다고 생각 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 113명(32.8%), ‘전혀 그렇지 않다’ 47명(13.6%)로 나타났다. 전략적 복지 포플리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40명(11.6%)이며 ‘그렇다’가 142명(41.2%)로 정치적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인식하였다.

다섯째,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화를 위한 방향 제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영양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에 대한 질문에는 ‘올바른 식습관과 식이요법 교육’ 146명(42.3%), ‘평생건강을 위한 단계별 영양 교육’ 139명(40.3%)이며 ‘바른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 46명(13.3%), ‘식단을 직접 작성하고 요리를 실습하는 체험 교육’이 11명(3.2%), ‘식품 알러지 및 특이체질 학생 등의 식이요법 상담’ 3명(0.9%)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믿을 수 있는 식재료 유통망을 확보하여 안전한 급식재료 사용’ 199명(57.7%)이며 ‘올바른 식생활 문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로 이미지 개선’이 81명(23.5%), ‘충분한 예산 확보’가 28명(8.1%), ‘식단과 조리법을 개발하여 급식의 질 향상’이 20명(5.8%), ‘공동구매 등을 통한 식재료 단가 낮추기’가 17명(4.9%)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보편적 학교 무상급식이 주는 가장 큰 도움으로는 ‘소득 격차 없이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며, 이는 ‘차별 없는 동등한 식사’, ‘균형 잡힌 식사 제공’,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는 긍정적인 무상급식의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의무교육대상자인 초,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절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금의 증가 되어도 찬성하는데 그 이유는 더 나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이다. 이는 무상급식이 복지의 확대이면서 급식도 교육의 한 부분이고 의무교육 영역에 급식도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무상급식이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영양교육과 무상급식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

VI. 참고문헌

1. 강은희. 무상급식에 관한 교직원 인식조사 연구. 상지 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2011.
2. 정숙임.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3. 김민희. 울산광역시 무상급식에 대한 교직원과 학생의 인식도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4. 현길아. 제주지역 무상급식 제도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 인식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5. 양지선. 무상급식에 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 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6. 이원희.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여중생 및 학부모의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경희 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7. 한은석. 경기도 학교 무상급식정책형성과정 분석 : 정책옹호연합모형 적용,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8. 이선희. 초·중학교 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분석.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9. 이해영. 무상 학교급식의 가능성 탐색,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교육과학기술부; 2009.

10. 백승희.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급식으로서의 무상 학교급식 확대, 교육기본권으로서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0.

11. 구희현, 안민석.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무상학교급식,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경기: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2009.

12. 김숙화. 무상급식 전환에 따른 광주지역 중학생과 영양(교)사의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 한국영양학회지 2013; 48(1):113-121.

13.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 실시현황.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6.

14. 뉴트리 앤; 2018 4. 16.

15. 이덕난, 한지호.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서울국회입법조사처; 2010.

16. 양건, SPA형법 각론 총론; 2007.

17. 권웅. 무상급식 논쟁의 정치적 의제화 과정에 관한 분석: 6.2 지방선거 기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18. 조민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무상급식정책 형성과정 분석-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19. 하봉운. 학교급식 무상성 논쟁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지 2010; 17(3):137-157

20. 이원영. 학교급식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0.
21. 김춘진. 2016년 각 급별·시도별·시군구별 무상급식 시행 현황. 연합뉴스보도자료. 2016.3.15.
22. 김대호, 김태일.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한국에서 보편주의 논쟁의 특수성과 그 함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지 2010; 2010(6):36-59
23. 임대윤. 대구 시장 예비 후보 의무급식(무상급식) 정책발표. 2018.5.8.
24. 정명옥. 59차 참여 사회 포럼: 왜 친환경 무상급식인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2010. 3. 23.
25. 김상곤. 무상급식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 사람과 정책 제2호 136-147. 2011.
26. 강명순. 무상급식의 사각지대를 위한 정책 과제. 국회 정책 자료집 제3-4호. 2010.
- 교육과학기술부. 2018 학교급식기본방향
- 중앙일보, 2009.12.2.
- 경향신문, 2010.2.22.
- 경향신문, 2010.3.18.

제주일보, 2016.3.15.

경남연합일보, 2018.4.25.

무상급식에 대한 제주지역 교직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하여 평소 선생님께서 느끼고 생각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된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학교 급식운영 개선에 소중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순수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리며,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강 미 나
지도교수 신 동 범

I. 설문조사를 위한 일반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 ① 만 30세 미만 ② 만 30-40세 ③ 만 41-50세 ④ 만 51세 이상

3. 귀하의 직위는?

- ① 교사 ② 행정직 ③ 기타

4. 귀하의 근무경력은?

- ① 5년 이하 ② 6년~10년 ③ 11년~20년 ④ 21년 이상

5. 귀하에게는 취학자녀(초·중·고)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6. 귀하가 근무하는 학교의 급별은?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특수학교

II. 학교 무상급식 운영 관리에 대한 인식

1. 학교 무상급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학교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② 에 응답하신 분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의무 교육의 일환이어서
②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므로
③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동등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④ 도시락을 싸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어서
⑤ 저소득층 자녀만 선별해서 하는 것은 불평등하므로

1-2. 학교 무상급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④⑤에 응답하신 분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 더 필요해서
②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불필요하므로
③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서
④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선별해 돕는 선택적 복지가 옳으므로

2. 학교 무상교육의 범위에 급식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② 포함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⑤ 절대 포함해서는 안 된다.

3. 학교무상급식의 대상 범위는 어느 범위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치원생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⑤ 대학생

4. 무상급식은 어느 계층까지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만을 선별하여 무상 지급(선별적 무상급식)
- ② 저소득층 자녀부터 시작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무상 지급(단계적 무상급식)
- ③ 모든 학생에게 전면 무상 지급(보편적 무상급식)
- ④ 어린학생들에게 먼저 무상급식 실시

5. 학교 무상급식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5-1) ② 그렇다.(5-1)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5-2) ⑤ 전혀 그렇지 않다.(5-2)

5-1. 학교 무상급식의 교육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 (①② 에 응답하신 분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소득 격차 없이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줌
 - ② 편식 교정, 올바른 식사 예절 및 규칙을 알게 해줌
 - ③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는 것 자체가 교육
 - ④ 배고픔을 없애 주어 다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줌
 - ⑤ 친구를 사귀고 체육활동을 하는 등 다른 교육에 도움을 줌

5-2. 학교 무상급식이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④⑤ 에 응답하신 분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단순히 식사를 제공 받는 것이지 교육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
 - ② 급식에 제공되는 식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③ 급식을 하기 싫은 학생도 강제로 먹어야 해서
 - ④ 국가의 사회 복지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

Ⅲ. 학교 무상급식의 복지적 측면에 대한 인식

6.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선별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6-1) ② 필요하다.(6-1)
- ③ 보통이다. ④ 필요없다.(6-2) ⑤ 전혀 필요없다.(6-2)

6-1. 선별적 무상급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②번을 선택한 경우)

- ① 저소득층 자녀만 선별해서 무상 급식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으므로
- ② 학생 전부에게 무상급식을 할 때 오는 낭비를 막을 수 있으므로
- ③ 형편이 어렵지 않은 학생의 급식비는 부모가 내는 것이 옳으므로
- ④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돕는 것은 국가의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므로

6-2. 선별적 무상 급식이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④⑤번을 선택한 경우)

- ① 저소득층 자녀만 선별해서 하는 것은 평등하지 못해서(역차별)
- ② 선별 없이 학생 전부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해서
- ③ 선별된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로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서
- ④ 형편이 어려운 가정만을 돕는 것은 국가의 보편적 복지에 위배되므로

7. "모든 학생에게 지원되는 전면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을 준다. ② 도움을 준다.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을 주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8. 보편적 전면 무상급식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산부족
- ② 국민의 조세부담 가중
- ③ 세금낭비
- ④ 다른 교육의 우선적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방해
- ⑤ 국가에 대한 복지의존 성향(복지병)을 증가시킴

9. 전면 무상급식이 소득재분배(부자들의 세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전하는)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을 준다. ② 도움을 준다.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을 주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IV. 학교 무상급식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인식

10.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가(교육과학기술부)(10-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10-1)
- ③ 지방자치단체(10-1)
- ④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10-1)
- ⑤ 사회적 기금 조성을 통해

1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②③④ 에 응답하신 분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급식은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 ②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 ③ 기존 선별적 급식비 지원 학생들이 느꼈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 ④ 학교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11. 학교무상급식으로 인해 세금이 증가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11-1)
- ② 찬성한다.(11-1)
- ③ 보통이다.
- ④ 반대한다.(11-2)
- ⑤ 매우 반대한다.(11-2)

11-1. 세금이 증가한다 해도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② 에 응답하신 분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국가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 ②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함
- ③ 더 나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 ④ 더 나은 급식의 질을 위하여

11-2. 세금이 증가한다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④⑤에 응답하신 분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일시적으로 내는 세금의 증가로는 지속적 유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 ② 국가의 현재 재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③ 무상급식을 증세까지 해서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④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세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V. 학교 무상급식의 현안에 대한 인식

12. 학교 무상급식은 수익자부담의 유상급식에 비해 일반적으로 '급식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3. 학교급식에서 잔반으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와 무상급식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4. 전면 무상급식이 많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절감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5. 학교 무상급식을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할 경우 현재 다른 교육비 예산의 부분 삭감이 일어나도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6. 선거 시 정당과 정치인들이 "학교 무상급식"을 공약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옳다. ② 옳다. ③ 보통이다.
④ 옳지 않다. ⑤ 매우 옳지 않다.

17. 학교 무상급식의 시행은 정당의(동정표 호소를 위한) 전략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포퓰리즘 (populism) :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함.

18. 최근 타. 시도의 학부모, 시민 단체에서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반대 행보(시위, 단식, 서명운동 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공감한다. ② 공감한다. ③ 보통이다.
- ④ 공감하지 않는다. 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9. 최근 타.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무상급식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① 전면 무상급식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므로 급식비 단가를 예산에 맞춰 조정한다.
- ② 선별 무상 급식으로 전환하되, 급식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한다.
- ③ 어떤 결정이든 시, 도교육청에서 결정한대로 동의한다.
- ④ 관심 없다.

20. 현재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는 초. 중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하게 된다면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20-1) ② 찬성한다.(20-1) ③ 보통이다.
- ④ 반대한다.(20-2) ⑤ 매우 반대한다.(20-2)

20-1. **“무상급식 중단”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② 에 응답하신 분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무상급식비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을 열악하게 하므로
- ② 급식비는 충분히 납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 ③ 무상급식비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
- ④ 무상급식비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중되는 세금이 부담 되어서
- ⑤ 무상급식은 정치적 성향을 띤 전략적 포퓰리즘의 일시적 현상이므로

20-2. **“무상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④⑤에 응답하신 분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모든 학생들은 급식비 부담에서 벗어나 차별 없는 급식을 제공받아야 하므로
- ② 국가의 교육 복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 ③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기 때문
- ④ 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은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 ⑤ 시행되는 제도를 바꾸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21. 학교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정착화 되기 위해서 영양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평생건강을 위한 단계별 영양 교육
- ② 올바른 식습관과 식사예절을 교육
- ③ 바른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
- ④ 식품 알러지 및 특이체질 학생 등의 식이요법 상담
- ⑤ 식단을 직접 작성하고 요리를 실습하는 체험 교육

22.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믿을 수 있는 식재료 유통망을 확보하여 안전한 급식재료 사용
- ② 올바른 식생활 문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로 이미지 개선
- ③ 공동구매 등을 통한 식재료 단가 낮추기
- ④ 충분한 예산 확보
- ⑤ 식단과 조리법을 개발하여 급식의 질 향상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A study on the awareness of staff on Jeju Island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free meals

Mi-Na Kang

Department of Nutri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research the perception of the faculty members about free meal service in elementary, middle, high and special schools staff. The survey has been conducted targeting schools staff members working in elementary, middle, high and special schools located in Jeju. Statistical data has been processed through the SPSS 18.0 program and frequency analyze the data. The result of the study on the school faculty's perception of free meal service in elementary, middle school follows:

First, the question of the "Yes," which requires a gratuitous meal in terms of managing the maintenance of a gratuitous meal very yes, the positive answer is 241 (69.9%) out of 345 investigators, and the main reason for this is that the 'segregated equivalent meal' is the largest and 'balanced meal offer' and 'compulsory' as part of the order.

The winner of the complimentary meal is the "high school student" with 161 (29.0%) questions, questions about the support of the free-for-food education are the "very yes" and "yes" responses to 224 people (64.9%), and the greatest help of the gratuitous meal is 158 (28.5%), where all students have the same meals without income gaps The most numerous.

Second, in terms of the welfare of gratuitous meals, the question of how a gratuitous meal helps the universal welfare is a positive answer, "very helpful." 81 (23.5%) and ' help, 141 (40.9%) responded to 222 people (40.0%)

The question of what is the full-charge meal issue is that 177 (51.3%) said that the budget was insufficient, and then the ' tax burden of the people, ' 62 (18.0%), ' tax waste ' 21 (6.1%), ' budget allocation for other education preferences ' 47 (13.6%), and ' welfare dependence on the country ' 38 (11.0%). The question of helping to redistribute income in a gratuitous manner was answered by "very yes," 42 (12.2%), and ' yes ' 116 (33.6%).

Third, in the financial aspect of the gratuitous meal, the question of the subject of the gratuitous food finance burden is ' country ' 124 (35.9%) and '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 192 (34.6%), the main reason for the question of why the country or the local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free lunch is because ' school lunches have been implemented by national policy ' 145 people (26.1%) and "school education because the state must be responsible," was recognized as being the reason for the support of 112 people (32.5%).

The question of the consent of the charge for the increase of the complimentary dietary tax is ' very agree ' 27 (7.8%) and ' approve ' 82 persons (24.3%), and the main reason for agreeing to be ' a better welfare society ' is 49 (44.1%). And the main reason for the opposition is that 55% (43%) of the response to ' gratuitous eating is wasted ' Appeared.

Fourth, in recognition of the current issue of the free-for-food operation, the free-lunch is considered to have dropped the quality of the feed, the question of "it is not" 122 (35.4%), ' Not at all ', 80 (23.2%) appeared.

The question of whether to give parents the cost of tuition savings is the

"very yes, ' 54 (15.7%) and ' yes ' and 168 (30.3%) were recognized to help reduce education cost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trategic welfare populism is "very yes" is 40 (11.6%), and "yes" is the political popularity policy of 142 (41.2%).

The question of how nutrition education should be asked to understand the direction presented for the stable settlement of gratuitous meals is ' 146% (42.3%), ' teaching proper eating and eating etiquette "139 (40.3%) of nutrition education for life-long Health, ' 46 (13.3%), ' Education for choosing the right food ', and 11 (3.2%) of ' hands-on training to create your own diet and practice cooking ' , and "dietary Counseling for food allergies and specificity students" (0.9%)

The question of what should be done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free-of-charge meals is ' safe food use by ensuring reliable materials distribution network ' 199 (57.7%) and ' improved image quality ' with the education and publicity of the Right food culture, ' 81 (23.5%), ' Securing sufficient budget ' to 28 persons (8.1%), ' develop meals and recipe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feed ' 20 people (5.8%) , the "lowering of the material unit price through joint purchase" was found at 17 (4.9%).

The complimentary meal appeared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direction of the school lunch and the changes in the school meal system, and sparked much interest in the pledge of local elections. The complimentary meal is a benefit for all people, as it can relieve the burden of the parents by reducing the cost of food and the delinquent in economic difficulties. Feed is a part of education, and is included in the compulsory area. Compulsory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s must be free of educational fees under the Constitution. In compulsory, all children have the right to attend school at no charge, and parents can reduce their education expenses, and allow them to conduct a meal without discrimination and hurt children. The idea is that we cannot

acceptably with the logic of giving kids free rice while recognizing the need for a free lunch, because I use some politically free meals in an institutional basis and without enough understanding, there is a voice of concern that a 1,000-degree flat meal can degrade the quality of food, reduce the budget needed for improvement in other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decrease the quality of education.

In order to ensure the free-of-charge meal, yWe will be able to study the efficiency measures for the operation of the free meal system and expect the stabilization of gratuitous meals through the support of the operation of the overall feed, such as catering management, sanitation and safety management and operational evaluation.ou will have to spend your finances efficiently by conducting a free meal.

In order to stabilize the free-standing system, we can expect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health improvement by providing a high quality of systems to reduce budget waste. In order to stabilize the free-standing system, we can expect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health improvement by providing a high quality of systems to reduce budget waste.

There are many regions that currently perform full-time meals for compulsory and junior high schools nationwide, and there are some areas that are only partially carried out. The comments on the free lunch will still be of great interest, so research should continue to expand the ongoing academic research and stabilize the free and efficient food system.